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평화인문학연구단(HK) 출범기념식

통일을 바라보며 평화를 생각한다

일시) 2011년 4월 29일(금)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PROGRAM

등록 | 13:00~13:30
개회식 | 13:30~14:00
개회사: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축사: 오연천 (서울대 총장)
배규한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제 1회의 | 14:00~15:40

사회: 권영민 (서울대 교수)

21세기 한반도와 통일·평화

지구촌의 미래와 생명평화연대운동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이사장, 전 적십자사총재)

통일을 위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통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접점의 모색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휴식 | 15:40~16:00

제 2회의 | 16:00~18:00

사회: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백영서 (연세대 교수, 국학연구원장)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

황광석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만찬 및
기념행사**

18:00~20:00

특별음악순서

피아니스트 임미정 (한세대 교수, 하나를위한음악재단)

CONTENTS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인문학연구단 소개 / 3

발표자 약력 및 기관소개 / 5

제 1회의

21세기 한반도와 통일·평화

지구촌의 미래와 생명평화연대운동 / 29

– 미래 한국의 비전과 공동선운동의 과제 / 29

– 생명평화선언 / 33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이사장, 전 적십자사총재)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 통일논리의 수렴을 위하여 / 35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점점의 모색 / 50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제 2회의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백영서 (연세대 교수, 국학연구원장)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 63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한반도형 평화의 실천적 모색 / 67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 / 70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

DMZ, 20세기가 남기고 간 냉전유적 / 74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신뢰회복 노력과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으로 다져가자 / 79

황광석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인문학연구단 소개

본 연구 사업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비전으로서의 평화(peace)를 종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학제적, 융합적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이 연구는 전통적인 안보와 평화개념을 넘어 환경과 문명, 생활양식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평화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필요한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지향합니다.

이 연구단이 구상하는 평화학은 20세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되 21세기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가치지향적 전망을 포괄하는 연구입니다. 평화를 주로 전쟁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이 국가 간 관계에 주목한데 비해 이 연구단이 지향하는 평화학은 국가 이외의 개인과 공동체, 조직과 문화, 전지구적 단체와 네트워크까지 연구의 대상에 포괄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주목하면서 동시에 비국가적 변수들의 기능과 중요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공존과 관용의 정신과 문화, 종교적 윤리와 생태학적 생명론 등은 개인과 단체, 공동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연구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협력과 실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적 경험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사상적, 문화적, 역사적 경험들을 소중한 정신적, 문화적 자산으로 삼을 가능성도 진지하게 궁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연구단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평화 연구의 흐름과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연결해 한반도형 평화론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지구보편적 가치이고 이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지만 그 논의 속에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녹아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 변형작업이 불가피합니다. 한반도에 필요한 평화는 남북 분단의 구조와 이와 연관된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통해 강대국 중심이 아닌 중간규모 국가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평화론의 세계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대결구조, 평화체제 논의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화, 가치, 생활양식, 담론, 습관과 사유의 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단이 지향하는 평화인문학은 현실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학적 함의와 중장기적인 가치형성, 문화 창조, 비전구축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사회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창조적 결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론은 불가피하게 통일, 안보, 군축, 비핵화 등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평화학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고 자칫 단기적인 정치론으로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학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 종합적 구상, 문명론적 실천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역사적 비전이며 이는 인간의 제조건을 고려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껴안아야만 얻어지는 큰 그림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물론이고 종교간 공존과 생태적인 평화까지를 포괄하는 21세기 기형 평화론의 구축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문학의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시/거시, 제도/담론, 이론/실천, 보편/특수, 분석/가치, 인류/민족의 차원들이 통합되고 소통되며 융합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회식 축사

오연천(吳然天)

[현직]

현 서울대학교 총장
현 재단법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학력]

1974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1977~1982 미국 뉴욕대학교(N.Y.U) 석사 및 박사(MPA, Ph.D.) (전공 : 재정관리)

[주요 경력]

1983~201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00~200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2007~2009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2008~2010 (재) 바이오신약장기사업단 이사장
2005~2009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및 선임이사
2008 기획재정부, 공기업선진화특위 위원장
2003~200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2007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
2000~2006 국회, 재단법인[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2001~2003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2005~2010 서울대학교 병원 발전후원회 이사
2009~2010 서울대학교 특별재정위원회 위원장
2008~2009 서울대학교 법인화위원회 재정·회계위원장
2006~2009 서울대학교 평의회 재정분과위원장
2005~2006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2003~2006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특별고문
2003~2004 서울대학교 학장회의 운영소위원회 간사 위원

[주요 저서 및 연구 업적]

2009 강한시장과 건강한 정부, 올리브엠엔비
1996 재정개혁의 전망과 재산세제의 개선과제, 집문당
1992 한국조세론, 박영사



개회식 축사

배규한(裴圭漢)

[현직]

현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현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학력]

1970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업(문학사)
1976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사회학 석사)
1980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Ph. D. in Sociology)
1992 Research Associate, The Institute of Industrial Rela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주요 경력]

1985~ 현재 국민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9 한국연구재단 초대 사무총장
2009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이사장직무대행
2008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2008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2008 (재)아산문화재단 장학위원회 위원/위원장
2008 (사)한국사회학회 이사
2007 (사)한국사회학회 부회장
20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책연구기관) 원장
2002 (재)성곡학술문화재단 운영위원
2002 KBS 객원해설위원
2000~2002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1995~1999 국민대학교 학생처장
1996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회장

[주요 저서 및 연구 업적]

저서: 미래사회학,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등 21권
영문논문: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Social Forces 등에 11편
국문논문: 한국사회학, 정보와 사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등에 36편



제 1회의 '21세기 한반도와 통일 · 평화' 발표자

서영훈(徐英勳)

[현직]

- 현 (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현 (사)세계선린회 이사장

[학력]

- 1952 서울 신문학원 졸업
- 1959. 3 국제대학교 교육과 3년 수료(명예졸업)
- 2000. 2 원광대학교 철학과 명예박사
- 2001. 4 서경대학교 명예학사학위
- 2002. 5 호서대학교 명예인문학박사
- 2002. 5 러시아국립국제관계대학교(MGMIO) 명예사회학박사

[주요 경력]

- 1983~1986 (사)흥사단 이사장
- 1988~1990 한국방송공사(KBS)사장(한국방송협회 회장 겸임)
- 1992~ 현재(사)세계선린회 이사장
- 1998~ 현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1999~2000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 1999~20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화해협력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0. 1. 20~12. 27 새천년민주당 대표
- 2000. 12. 28~2003. 12. 28 第22代 대한적십자사 총재
- 200~ 현재 (사)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 2001~2010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 2003. 6~2005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주요 저서 및 연구 업적]

- 자유시민 서영훈의 세상 읽기(백산서당, 1998. 9. 10)
- 평화의 계단(백산서당, 2002. 4. 10)
- Steps to Peace - Life Ethics and Universal Love - (백산서당, 2003. 11. 11)
- 부름 받아 걸어 온 길 뜻을 따라 가야 할 길(백산서당, 2005. 12)

사단법인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설립목적]

한민족의 상생번영과 지구촌 평화복지의 기초가 되는 인류 보편가치와 공동선을 추구·실현하여 21세기 신사회 건설에 기여함

[주요활동]

2010년 주요 공익활동

- 동아시아 LOPS 미래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중일 청년학생 50명과 지도자 및 학자 13명 참가하여 "제2회 동아시아LOPS포럼" 개최
- 시민교양강좌 공동선 포럼 4회 개최 및 공동선 아카데미 12강좌 진행
- 잡지(계간) 우리길벗 4회 발간
- LOPS 총서발간

2011년 주요사업 계획

- "제3회 동아시아LOPS포럼" (도쿄대회) 추진
- LOPS 학술세미나 개최
- LOPS 총서 발간
- 공동선 포럼, 공동선 아카데미
- 잡지 우리길벗 발간



제 1회의 '21세기 한반도와 통일 · 평화' 발표자

김진현(金鎭炫)

[현직]

- 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 현 녹색성장포럼 대표
- 현 대통령자문 통일고문회의 고문
- 현 한미비전협회 이사장

[학력]

- 1958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업
- 1973년 美 하버드대학교 Nieman Fellow 과정 수료(경제개발 전공)
- 1995년 고려대학교 명예 경제학 박사, 광운대학교 명예 공학 박사

[주요 경력]

- 1984~1990 동아일보 논설주간 · 상무
- 1981~1984 한국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 부원장 · 대표이사
- 1990~1993 과학기술처장관
- 1994~1996 한국경제신문 회장
- 1995~1998 세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1995~1999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1999~2001 문화일보 사장 · 회장
- 2001~현재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2009~현재 대통령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 · 통일고문회의 고문, 한미비전협회 이사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주요 저서 및 연구 업적]

- 한국주식회사(1977)
-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1988)
- 한국—삶의 조건과 미래(편저,1996)
-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공저,2005)
- 일본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2006) 외 등 다수

세계평화포럼

[설립목적]

전 세계 평화 수준을 국가별, 지역별, 소득별로 분석 제시함으로써 지구촌 전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국가는 물론 세계 각지의 평화 수준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자극하는데 목적을 둬.

[주요활동]

2000년부터 세계 평화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World Peace Index)를 개발하여 발표하여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는 한국에서 세계를 향하여 발신하는 유일한 국제 정보이다. 일기예보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처럼, 세계평화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세계평화의 경보체계(alarm system)를 만들려는 이상을 갖고 있다. 적극적 평화, 종합평화 개념에 의한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는 2000년부터 발표, 10년의 경험을 축적하여 세계평화상태의 질과 구조 경향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제 1회의 '21세기 한반도와 통일 · 평화' 발표자

기미야 다다시

[현직]

도쿄대학교 대학원 정보학환
(The University of Tokyo, Interfaculty Initiative in Inform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disciplinary Information Studies) 교수

[학력]

도쿄대학교 법학부 졸업, 동 대학원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수료 정치학박사

[주요 경력]

일본 호세대학교 법학부조교수
도쿄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준교수, 교수
2011년부터 정보학환 부속 현대한국연구센터를 위해 기한부로 대학원 정보학환으로 이적

[주요 저서 및 연구 방향, 연구 업적(한국어)]

한편으로는 비교정치학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경제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의 정치적 조건에 관한 연구나 한국의 민주화에 관한 이론적이고도 일차자료를 구사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주변(periphery)"이면서도 "전초(outpost)"라는 한반도의 시각을 살리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사적 전개를 다시 보려고 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시기 1960년대 1970년대 한미관계,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각적 외교의 가능성을 재조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박정희 외교를 재해석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한미일 3개국의 외교 문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외교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박정희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서울, 후마니타스, 2008

"한국 외교의 동학: 1970년을 전후로 한 변화를 중심으로" 장달중 오코노기마사오 공편 "전후 한일관계의 전개" 아연출판부, 2008년, pp. 43-79.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한일관계 "일본공간" 창간호, 2007년, pp.162-185.

"1960년대 한국의 냉전 외교의 세 가지 유형: 한일국교정상화, 베트남 파병, 아시아태평양이사회" 문정인, 오코노기마사오 공편 "한일 공동연구 총서 4 시장, 국가, 국제체제" 아연출판부, 2001년, pp.95-146.



제 2회의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토론회

백영서

[현직]

현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장

[학력]

1984~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동양사학
1982~1984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 석사
1972~1981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학사

[주요 경력]

2006. 12~ 홍콩중국근대사학보 편집위원
2006. 01~ 창작과비평 편집주간
2006. 01~ 중국근현대사학회 회장
2005. 09~ 대만사회연구 편집위원
2005. 01~2005. 12 현대중국학회 회장
2003. 09~2004. 12 현대중국학회 부회장
2002~ 동아연구 편집위원
2002. 03~ 대동문화연구 편집위원
1998. 09~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1992. 10~1994. 02 한림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1989. 03~ 창작과비평 편집위원
1988. 10~1992. 09 한림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설립목적]

국학연구원은 1948년에 창립된 동방학연구소의 학문적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국학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의 언어, 문화, 역사, 철학, 종교 등을 중심으로 역사적 관련이 깊은 동아시아 문화도 함께 연구하여, 그 성과를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적극 보급함을 지향한다.

[주요활동]

위의 목적을 가지고 국학연구원은 학술지 및 국학관련 기본도서 발간, 정기연구발표, 공개강좌 및 부 정기 학술회의 개최, 연구위촉과 그 지원, 전문학자의양성, 국학자료수집 및 정리, 국내외 학문교환과 그 지원 등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21세기 한국학연구의 중심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제 2회의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토론자

조명숙(趙明淑)

[현직]

여명학교 교감
피난처 이사

[주요경력]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간사
통일강냉이(탈북자 구조단체) 간사
두레자연고등학교 교사
피난처 자유터학교장

[주요 저서 및 연구 업적]

꿈꾸는 땅끝(규장 2006)
여기가 당신의 피난처입니다.(창작과 비평 2010)

여명학교

[설립목적]

여명학교는 북한의 경제난을 피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해 동포애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2004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사회와 공교육에서 부적응하는 상황에서 1990년대 북한의 위기에 식량원조로 돕거나 중국에 탈출한 북한동포를 보호하며 지원하던 단체와 현장 활동가들이 설립한 고등학교과정의 대안학교입니다.

[주요활동]

1. 현재 학생인원(2011.3.21. 현재) : 초·중학교 19명, 고등학교과정 40명, 총 59명 재학 중
 - 교육공백이 길었던 고 연령의 학생(16세~25세)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보호가 필요한 학생(4개의 기숙사운영)
2. 교사현황
 - 전임교사: 14명
 - 강사: 20명
3. 학력인정후의 장점
 - 검정고시(4개월 단위 교육과정)→3년 단위의 안정적 학사운영
 - 탈북 청소년 특성에 맞춘 신앙교육, 남한사회 적응교육(경제,문화), 인성교육(가치관, 예절)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대안교육 실현
4. 교육효과
 - 학생 : 북한이탈 청소년 맞춤형 교육으로 회복 및 자아성장
 - 교사 : 통일 교육 전문가로 성장
 - 학교 : 통일 교육 대안창출, 제도개선 견인
 - 사회화 기본교육



제 2회의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토론자

최대석

[현직]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협동과정 교수(2006~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2007~현재)
북한연구학회 회장(2011)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2011)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2007~현재)

[학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82)
씨러큐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1984)
클레어먼트 대학교 정치학박사(1993)

[주요 경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1994~1996)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1996~2006)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설립목적]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은 북한·통일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일학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 분야의 전문 여성인력의 양성을 위해 2005년 3월 이화여자대학교 본부소속 연구기관으로 발족했다.

[주요활동]

이를 위해 통일과 북한에 관한 국내·국제 학술대회, 강연회, 콜로키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학술 교류 및 남북 공동 연구를 계획·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논문집, 보고서, 학술 저널의 형태로 발간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통일학 담론을 국내외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연구원의 각 프로젝트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이 북한의 현실, 남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 특히 여성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 ~ 2010년까지 <이화 통일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미국 민주주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개발지원아카데미 전문가과정 입문>을 개설하여,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과 민족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계발하고, 미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탈북자 및 북한 사회와 관련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한 사회과학지정주제 사업인 "탈북이주민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0년에는 노동부에서 발주한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연구", 통일부에서 발주한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 실태 및 주민의식 변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발주한 "탈북자 정착연구실태 분석과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등의 연구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1년에는 통일부에서 발주한 "민족공동체 추진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동향브리핑을 통해 매 주 화요일 한 주간의 북한관련 이슈를 정리·분석하여 교내외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으며, 2011년 6월부터 매 학기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이해, 국제 문제의 한반도 수용이라는 쌍방향 학술연구를 진작할 영문저널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을 발간 할 예정이다. 매년 통일학연구원 총서를 기획하여 현재 [북한문학의 지형도 1, 2], [남북관계사], [선군시대 북한 여성·가족의 삶]을 출판하였다. 탈북학생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2011년 3회를 맞은 <역사·통일·평화 토론회>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 향후 통일사회의 주역이 될 남북한 출신 새세대들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남북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 새로운 통일상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매 년 <북한이탈 청소년 대학입시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8.15 Beautiful Dream Concert>도 열고 있다.

2011년 하반기에는 남북한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21세기 사회평화, 국가평화, 민족평화의 지도자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 <대학생 통일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 2회의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토론자

한용섭(韓庸燮)

[현직]

국방대학교 부총장

[학력]

- 1978.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 1985. 8.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졸업
- 1987. 6.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 1991. 9. 미국 랜드대학원 안보정책학 박사

[주요 경력]

- 1993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 1999~2000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 1999. 6~9. 몬테레이 비확산연구소 객원연구원
- 1995~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 2005~2006 대통령자문 국방발전위원회 위원
- 2005~2008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 2008. 12~2009. 7. 중국외교대학 교환교수
- 2006. 11~2010. 12 한국 평화학회 회장
- 2004, 2005, 2007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2005. 5~ 한중 싱크탱크 네트워크 부회장
- 2011. 2~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 자문위원

국방대학교

[설립목적]

국방대학교는 국가안보정략을 선도하는 국제적 수준의 안보 종합교육기관으로 국방대학교의 위상에 맞는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및 연구를 하며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안보와 국방 분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제 2회의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토론회

함광복

[현직]

현재 (사)한국DMZ연구소 소장, (사)DMZ미래연합 DMZ연구소장, 한국DMZ포럼 운영위원장, 통일부 코리아DMZ 협의회 국내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춘천시문화재단 이사장, 무용가 최승희기념사업회 부집행위원장 등을 지냈음.

현재 GTB강원민방 방송위원이며, GTB강원민방 대기자, 강원일보 사회부장, 江原道民日報 사회부장, 편집부국장, 뉴미디어 국장, 논설위원실장 등을 지냈음.

[주요 경력]

DMZ생물 종 다양성 위원회 발기위원, 박수근미술관 준비위원, 동미술관 운영위원, DMZ박물관 조성 자문위원, 철원평화플라자 자문위원, 경의선 남북철도연결사업 자문위원, DMZ평화생명동산운영위원, 강원대 DMZ Help 센터 자문위원, 문광부 PLZ 프로젝트 자문위원, 한국관광공사 관광활성화 위원, DMZ Society 운영위원, DOP(DMZ Otto Project) 운영위원, '연어사랑 시민모임' 총무 등

[주요 저서 및 연구 업적]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이스트워드 발행, 2002)
Opa, wenn du den Lachsen folgst, bist du in Korea(이스트워드 발행, 2004)
The Living History of the DMZ(이스트워드 발행, 2004)
DMZ, 그 자연사적 조명(집문당, 2006)
흐르지 않는 강(이스트워드, 2007)
The Barren Liver ; The Another History of the DMZ(이스트워드, 2009)
DMZ, 뜻밖의 여행(한국DMZ연구소, 2010)

[방송출연 및 제작]

함광복의 DMZ 평화기행(KBS, 2000)
연어를 기다리는 사람(해피닥스, NHK, 2002)
TV 책을 말하다(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KBS, 2003)
다시 쓰는 DMZ(GTB/SBS, 2005)
북으로 간 최승희(GTB/SBS, 2005)
함광복의 DMZ 리포트(GTB/SBS, 2006~2008)

한국 DMZ 연구소

[설립목적]

- 한국 DMZ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 연구, 기록, 보존, 전파, 교육
-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DMZ의 태생적 역할 부각 DMZ를 통한 국격 향상 모색

[주요활동]

- DMZ의 역사/문화/가치/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기록/출판 사업
- DMZ의 가치를 전파하는 대중교육사업
- DMZ 전문가 양성을 위한 DMZ 교육사업
- DMZ 콘텐츠 개발사업
- 국내외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 교류사업



제 2회의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토론자

황광석

[현직]

현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현 (사)희망래일 이사
현 (사)지속가능한관광사회적기업네트워크 이사

[학력]

1988. 2.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주요 경력]

1988. (주)일건상사 입사
1994. (주)포비전건설 창업
2000. (주)디지로그 기획관리실장 입사
2002. (사)동북아평화연대 기획실장 취임
2004.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 취임
2007. (주)바리의꿈 대표이사 취임
2007. (주)바리의꿈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승인

동북아평화연대_ PEACE ASIA

[설립목적]

- 동북아 한민족 간, 동북아 타민족 간의 이해와 협력
- 동북아한민족네트워크 및 동북아평화시민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평화공동체(정치공생체. 경제공영체. 문화공동체) 구현

[주요활동]

중국동포 자매결연

조선족 한국초청 사기피해가정돕기로 시작한 자매결연사업은 극빈 조선족가정 지원과 소액대출사업을 통해 자활의지를 돕고 생계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으로 확장

도서보내기 및 교육교류

매년 한글도서지원과, 장학금지원, 학교 홈페이지 제작지원 및 컴퓨터 교사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선족학교를 지원

교수학습/역사문화 사이트 제작(우리학교)

조선족교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선족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족정체성을 고취하고자, 교사들의 교수에 필요한 교안, 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와 함께, 한민족, 조선족 역사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용 사이트를 제작

한민족문화교실(멀티미디어 교실)지원사업

교실시설 지원(멀티미디어)과 함께 콘텐츠 지원, 멀티미디어와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 운영 촉진, 특히 정규과목에서 소외하지 못하는 한민족 역사문화에 관련한 활동 및 수업축진을 목적

고려인동포 자매결연과 농업정착자활지원캠페인

구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에서 재이주하고 있는 연해주 극빈 고려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1999년부터 고려인동포가정과 한국가정 간 자매 결연을 맺어 고려인동포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고려인 농업정착자활지원캠페인"을 전개하여 2010년 말 현재 230여 고려인농가의 자활지원이 진행

의료지원 활동

우수리스크 고려인 의사모임인 "우수리스크의사단"은 연중 의료봉사를 실시하며, 고려인문화센터(러시아한인이주140주년기념관) 내에서 외래병원을 운영 2009년에는 분리독립하여 (사)메디피스를 설립하여 의료봉사활동을 전개

한글교육 및 전통문화교류 활동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후 잃어버린 한글 교육과 한민족 전통문화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

고려인문화센터(고려인이주140주년기념관) 건립사업

기념관은 잃어버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독립정신을 이어받고 한·러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며, 한민족과 러시아의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다민족, 다문화 그리고 동북아평화를 추구하는 상징으로 발전

동북아코리안네트워크 국제회의 및 정책연구 활동

중국, 러시아, 일본 동포 학자, NGO활동가들이 상호이해와 신뢰의 구축, 동북아코리안네트워크의 비전 설정과 실천을 도모

동북아 민족현장탐방

러시아 및 중국동포사회의 삶의 중심지인 연해주와 연변지역을 방문하여, 고려인, 조선족 동포사회와의 만남과 이해를 통해 21세기, 동북아의 교류와 협력 한민족의 미래를 모색하는 현장투어를 실행

동북아청소년평화여행과 동북아코리안청년캠프

한국과 동북아의 청(소)년들에게 대륙의 기상을 접하고 미래의 꿈을 설계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해주와 만주일대를 여행하며 다민족 다문화, 대자연의 기상, 우리민족의 역사와 항일독립정신, 동포애 등을 배우는 단기 교육여행을 해마다 진행



만찬 및 기념 행사 특별 음악 순서

임미정 피아니스트

"비교할 수 없는 음악성과 뛰어난 테크닉을 갖추었으며, 음악의 중심을 끌어낼 줄 알고 내면의 소리로 청중과 대화할 줄 아는 피아니스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 중 하나가 될 것"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신실한 노래..."
 "냉철한 머리로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창출한 세련된 소리..."

음악 속에 언제나 상반된 색깔이 공존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는 임미정은 "남성적 파워와 큰 스케일 속에 여성적 섬세함과 우아함이 배어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무대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연주로 호평을 받아온 그는 세계적으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유학을 마치고 뉴저지주립대학에 재직하였으며, 2002년 울산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귀국, 2005년 9월부터는 한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외에서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줄리어드 음대(석사), 뉴욕주립대학(박사)을 졸업한 임미정은 1997년 미국 텍사스의 산 안토니오 국제 피아노 콩쿨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석권한 후, 뉴욕의 에이버리 피셔홀에서 아메리칸 로얄 심포니와의 협연 등을 통하여 강렬한 개성과 카리스마를 가진 연주자로 부상된 그는 이미 국내에서 육영, 삼익, 동아콩쿨에서 1위를 수상하여 탁월한 음악성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 받았었다.

2003년 국내 정상급 솔리스트들과 함께하는 계누인 앙상블의 창단 멤버로 의욕적인 실내악 연주도 시작한 임미정은 그동안 KBS교향악단, American 심포니, George Enescu Romarian 오케스트라, 조선국립 교향악단, 불가리아의 Sliven Philharmonic 등 세계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워싱턴, 뉴욕을 비롯한 북미와 유럽 그리고 중국의 5개 도시 순회 독주회 등 국제적 음악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7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The World Piano Competition'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2005년 가을엔 '제주에서 평양까지'라는 타이틀로 전국 7개 도시 순회독주회를 가져,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을 하나로 엮는 뜻 깊은 음악회를 가졌다.

특히, 남북문화교류를 위한 활동으로 지난 2000년~2003년 4월 평양에서 열린 국제 친선 음악제에 초청되어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하였고, 2000년 9월 뉴욕의 링컨센터에서 UN 50개국 지도자 정상회담을 기념하여 열린 남북화합대음악회에 초청되어 북한 작곡가 윤충남의 피아노 협주곡을 초연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전국순회독주회에서 북한곡 '아리랑과 '내고향의 정든집'을 초연하여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2005년 5월에는 남북음악교류와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단체인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을 발족,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한세대 음악학부장으로서는 분주한 가운데, 2007년 5월엔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으로 수원시향과 피아노 협주곡 '황하' 협연, 6월엔 중국 4개 도시 순회독주회를 가졌고, 10월 23일엔 코리안 심포니와의 협연이 있었다.

(사)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설립목적]

음악이 한 개인과 인류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름다운 꿈을 꾸어 보았습니다.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풀어야만 하는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음악이 한 개인의 삶을 아름답게 바꾼다면 전체로서의 인류가 더 지성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요활동]

- M4one 아카데미는 음악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음악이 모든 사람의 정신적 삶에 기쁨이 되게 하는데 목적을 둠
- M4one 콘서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는 콘서트
- M4one 해외사업은 해외음악봉사로 6개월의 해외음악봉사 프로그램

제 1회의

14:00~15:40

사회: 권영민 (서울대 교수)

21세기 한반도와 통일·평화

지구촌의 미래와 생명평화연대운동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이사장, 전 적십자사총재)

통일을 위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통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점점의 모색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통일을 바라보며
평화를 생각한다

미래 한국의 비전과 공동선운동의 과제¹⁾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이사장, 전 적십자사총재)

1. 머리말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과학문명의 경이로운 발전은 인간에게 일찍이 생각할 수 없었던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쾌락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의 빈곤과 인간성의 타락에서 오는 각종 흉악범죄와 새로운 사회악이 늘어나는가 하면, 환경파괴, 에너지 고갈, 국경 없는 경제의 무한경쟁 등 현대문명의 역기능적 폐해가 인류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인류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촌에서 문명의 도구를 선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며 평화롭게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지상의 명제를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인간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현명하게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방향 없는 지구촌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그 동안 수많은 시련과 악조건 속에서 한때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국제사회에 도전해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과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신문화를 동반하지 못한 물량적 졸속성장과 변칙적 통치체제의 강행군은 구조적 부정부패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뒤이은 민주화과정의 혼란은 사회기강의 해이와 사치낭비, 흉악범죄, 퇴폐풍조의 만연 등 심각한 병리현상을 빚어냈다. 깨끗한 사회를 지향해 개혁을 강행했던 문민정부도 무능·무원칙한 실정을 거듭하고 있어 그 앞길이 밝지 못하다.

이제 우리는 인류문명의 현주소와 그 위력이 보여주는 밝고 어두운 양면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예측하는 동시에, 우리가 겪어 온 과거와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지혜롭게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존엄한 인류적 양심과 민족적 소명감에 의거하여, 건전하고 정의로운 인간회복과 사회개혁에 다 함께 분발하여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한국인이 보다 신용있고 실력있는 국민이 되고, 시계 속의 한국이 수준 높고 고루 잘사는 문화 선진국이 되도록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한 반세기에 걸친 남북분단으로 인한 체계대립의 모순과 불행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복원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과업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와 정의, 평화와 복지가 실현되는 자랑스런 통일조국을 건설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며 새로운 세계의 평화질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일역을 담당하는 사명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참된 인간화의 근본과 건전한 사회건설의 기초가 되는 이념을 구현하는 공동선운동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한우리공동선(2007), 세림출판, p.92~100

2. 공동선운동의 기본방향

우리는 현대 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물질문명의 모순과 한국의 민족사적 시련 속에서 생긴 정신문화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화시대에 대비하여, 민족국가의 생존·발전을 도모하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간사회와 정의롭고 문화가 높은 선진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다음과 같은 공동선을 추구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1) 인간존엄성의 회복

우리는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 인간 그 자체가 목적임을 확인한다. 인간은 인간만이 지닌 고등한 기능과 자유가 양심과 이성에 의하여 올바르게 발휘될 때 그 존엄성을 구현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물질적 가치에 우선하며, 이는 정치적 이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 성별과 신분, 지역과 직종을 초월하여 존중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성상실과 도덕적 타락에서 생긴 이기적 탐욕과 교만, 거짓과 위선, 퇴폐와 음란, 지나친 허영과 사치, 방종과 무질서, 음해와 중상, 잔인한 폭력, 원한과 보복, 파괴와 살상 등 저열하고 비인간적인 습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참되고 선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덕성을 함양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고 협동하며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생명질서 존중과 환경보호

모든 생명과 자연은 위대하고 은혜로운 질서에 의한 삶의 공동체로서 존귀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생명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행위는 삶의 기반을 해치는 최악이다.

우리는 천지간 생명권의 온갖 생명현상을 애호하고 보존해야 할 중보자적 위치에 있는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든 정책의 시행과 생산·소비활동에서 인간생명의 존엄한 가치는 물론이고, 온갖 생명을 외경·존중하며 청정한 자연과 안전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윤리 회복과 자녀의 바른 교육

가정은 축복받은 인생의 요람이요 생활의 터전이 되는 공동체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과 위안, 희망과 활력을 얻으며 삶의 기본이 되는 윤리적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모시는 효도에 힘써야 하고, 사랑과 화합으로 부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인격과 역할을 서로 존중하며 부모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모범과 거울이 되도록 평소애 힘써야 한다. 조상의 가훈과 가풍을 존중하되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계획과 목표를 갖고 온 가족이 합심 협력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라 한국의 가정윤리가 손실되어 감을 우려하여,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건전한 가정윤리의 정립과 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4) 전인성과 전문성을 바로 기르는 교육의 실현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인생의 기본이 되는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탐구하고 존중하며, 사회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규범과 과학적 지식을 익히는 데 있다. 올바른 교

육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모든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그에 역행하는 유해환경은 정화되어야 한다.

교육자와 학습자간에 경애와 신의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건을 보장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내용과 제도가 청소년들에게 무리한 경쟁과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성장·발달단계에 맞추어 덕성과 지성, 정서와 신체발달을 균형있게 돕는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의 특성과 소질이 존중됨과 동시에 신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두뇌의 개발과 전문적 직능인의 양성도 배려되어야 하며, 지구촌 시대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도 길러야 한다.

(5) 건강한 도덕적 신사회의 건설

새롭고 바람직한 인간사회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선량하고 건전한 도덕성과 주인의식을 갖춘 자유인격으로 날마다 거듭나며 성숙해 갈 때 실현된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맡은 바 직분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며 이웃과 더불어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로 속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화합하며 협동해야 한다. 서로 믿고 사랑하며 친절하고 품위있는 신용사회, 유정사회, 예절사회를 실현하기에 힘써야 한다.

(6) 정의로운 민주 시민사회의 건설

참다운 민주국가의 발전은 국민 각자의 올바른 주인의식과 더불어 정의로운 제도와 공정한 법질서에 의해 이룩된다.

우리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일대 반성과 경신, 온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행사로 참다운 민주질서와 사회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공직사회와 온 국민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모든 사회관계에서 부당한 차별과 무질서를 추방해야 한다.

모든 선거와 법제도를 민주적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고, 정부는 국민을, 국민은 정부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7)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의 실현

사람답게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이며, 모든 사람은 의식주의 기본생활과 더불어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질병과 재난, 노약과 장애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있어야 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다 같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근면과 절제, 신용과 협동에 힘쓰며, 그러한 노력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사회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8) 수준 높은 문화사회의 실현

삶의 참다운 보람과 행복은 물질적 욕구와 더불어 정신적 욕구가 충족될 때 실현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와 생활문화의 저질화와 비윤리성을 크게 우려한다. 대중매체를

비롯한 언론문화의 기능은 인간의 지성과 덕성을 높여 주고 생활의 지혜와 품위있는 정서를 길러주는 데 있다. 건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우수한 민족문화 전통에 의한 정신적 완성과 문화적 창조를 위해 노력하며, 질 높고 멋있는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그 고른 향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정의의 실현

우리는 국가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기업윤리와 정의로운 노사협조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온 국민이 근면·절제하고 공평세제와 경영합리화, 건전한 직업윤리와 근로복지에 의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며, 국제적 신용과 협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제간에 정의로운 호혜평등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10) 평화적인 남북통일과 민족의 부흥·발전

우리 민족이 부흥·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는 미래 한국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구상이 있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 통일된 한국은 독재가 없고 빈곤과 부패가 없고 혼란과 동족상잔이 없으며,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는 자유와 정의, 평화와 복지가 실현되는 자랑스런 나라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단계적 교류와 협력으로 체제의 이질성과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민족화합과 공생공존의 큰길을 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인류공동체의 실현

세계에는 60억의 인류동포가 180여 개 나라에 살고 있다. 이제 인류는 하나의 지구 위의 세계에서 공존·공생해야 한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문화권에 속하든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문명의 힘이 주는 혜택이 인도적 정의에 의해 고루 향유되고, 보다 높은 도덕과 문화가 인류생활을 향상시키는 평화세계, 도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12) 종교와 신앙인의 윤리실천

모든 종교는 그 교리와 종지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지혜를 열어주어야 하고, 사랑과 자비를 발휘하도록 하며, 선과 정의를 힘써 행하도록 함으로써 악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자발적인 선의 힘을 일으키도록 향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된 종교간·종파간의 갈등과 차별을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극복하고, 독선적 권위주의에 의한 대립과 분쟁을 해소하고 초월해야 한다.

제행과 의식과 수량적 교세가 진리를 가리거나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직 인간을 죄악과 고통에서 구원하며 기쁨과 소망을 갖고 올바른 삶과 도리를 다하도록 인도하고 봉사해야 한다.

(1994.10.13 ‘공동선운동’을 시작하며)

생명평화선언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이사장, 전 적십자사총재)

우리는 여기에 인류의 미래생존과 안전한 행복을 위하여 생명질서와 평화연대의 큰뜻(大義)을 밝혀 선언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산업화의 정점에서 고도의 물질문명의 과행(과행)적 독주시대를 열었던 20세기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화두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났다. 전쟁과 갈등 혼란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기는 냉전해체를 통해 온 인류가 평화공존을 누릴 수 있는 교훈과 기틀을 남겨주었다. 풍요와 복지가 지구촌 곳곳에 고루 퍼지는 꿈과 더불어 새 천년의 새벽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인류사회가 이와 같은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는 매우 험난하고 엄중한 것들이다. 지구촌 190여개국의 문명권 간, 선후진 간, 이념체제 간의 갈등과 국익경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상존할 뿐 아니라, 날로 확대 가속화되는 부와 정보의 경쟁과 격차, 핵무기 개발을 불사하는 극단주의와 폭력사태의 확산으로 지구촌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풍요와 편익을 제공해준 물질문명의 남용과 오용에서 온 역기능은 지구상 생명권의 환경과 질서를 오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에너지 자원을 탕진 고갈시키고 있다.

지금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문명의 지도를 그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문명의 순기능을 활용하면서 그 역기능을 막아내는 전 세계적 운동, 지구촌 생명권의 보호와 진정한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범인류적 각성과 분발이 있어야 한다.

광대무변한 우주천체 속에 가장 축복받은 초록별 지구의 운행과 생명의 진화를 통해 탄생한 인간은 천부의 양심과 지(智)적 능력으로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이해하고, 어울려 모여사는 사회집단을 형성하여, 문명을 발전시켜온 주체이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고유본성과 당위적 사명을 자각하여 새로운 인류문명을 열어가자 한다면 인류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생명과 평화, 이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의 밝고 안전한 미래를 지향하는 문명사적 전환을 추구하는 지상의 과제요, 바른 길이다.

생명과 평화는 불가분의 공동운명이요, 최고 지상의 가치이다. 모든 생명이 온 생명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평화는 생명과 온존하게 만난다. 또한 '모든 사람과의 온 인류와의 평화공존'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체의 '생명질서와 평화연대'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축적한 경험과 성과들을 기반으로 새롭고 높은 단계로 향상하며 거듭나 선진(善進)하기 위

한 인류보편의 가치요 목표다.

'생명질서와 평화연대' 실현은 우리 민족에게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 20세기를 거치는 동안 한민족은 국제질서의 갈등과 충돌의 최전선에서 역사상 미증유의 처참하고 거둬진 침략과 정복, 그에 맞선 치열한 저항과 고난을 치루며 경험한바있다. 20세기 유산인 냉전의 폐해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며, 서구 물질문명의 성과와 더불어 그 모순과 한계가 첨예하게 드러나 부딪히는 현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문명의 긍정과 부정이 맞닿은 교차지점인 동시에 인류사적 갈등의 희생양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곧 밝음과 어둠의 갈림길에 서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과 활로를 제시하고 열어주게 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0세기는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인류의 꿈이 생명과 평화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갈등과 화해, 성장과 파괴가 극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한국에서 생명평화를 향한 삶이 실현된다면, 이는 문명사적 일대 전환의 길을 여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민족은 생명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오랜 정신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는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경쟁과 발전에도 놀라운 성공을 통해 후진사회에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한바 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생명과 평화'의 정신문화 발전이라는 막중한 과제가 놓여있다. 인류 역사의 모순과 동서 문명의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 바로 그 곳이 삶의 현장인 한민족이 생명과 평화연대의 큰뜻(大義)으로 새로운 인류문명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소명이요, 역사의 명령이다.

금년은 경술국치 100년, 안중근의사 순국100년, 6.25동란 60년, 4.19혁명 50년, 광주민주화운동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는 이 기구하고 영욕이 점철된 과거사를 회오(悔悟)반성하며, 통절하고 값비싼 역사의 교훈과 유업을 바로 살려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미래의 인류문명이 태동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한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 안보, 통일논리의 수렴을 위하여-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前.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I. 북한다루기 20년의 실패와 그 원인

20년 전 영변원자력 발전소에서의 핵무기 원료 추출의혹으로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은 이제 두 차례 핵실험까지 마쳤다. 플라트늄 분리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개발까지 공언, 공개 하고 있다. 거기에 중거리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성공단계에 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UN, EU, FAO으로부터 원조는 계속 받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지난 20년은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5개국의 북한 다루기, 북한의 평화조건과 환경 만들기에서 완전히 실패, 철저한 실패를 기록한 기간이었다. 북한은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5대국’을 상대로 철저하게 승리하고 성공했다. 미국을 상대로 Banco Delta 사건에서 보듯 미국 대통령과 국무성과 재무성과 중앙은행을 완전히 농락할 수 있는 ‘연출력’을 보여주었다. UN이 두 번씩이나 대북한 제재결의를 공식화했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직접적으로 대담한 살상행위, 전쟁도발행위를 했음에도 중국은 더 가까운 우방으로 변했다. 중국으로부터의 ‘동맹’적 지원으로 UN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제재는 빛을 바래고 있다.

15~20년 전만 해도 북한은 200~400만명의 사자가 발생하고 소련붕괴로 대외관계는 완전 고립되었다. 중국의 GDP는 인구에서 25분의1도 안되는 대한민국보다 작았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자본, 모두 우리의 도움을 요구했었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의문의 여지없이 대한민국 주도로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리드하며 통일과정을 수행할 줄로 예상했고 이를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 혼자 상대하기 버겁게 되었다. 북한은 21세기 개명 천지에 3대 세습을 자행하고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성단계로 들어가려 한다. 가장 전형적인 실패국가이면서 가장 모험적인 게임에 성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제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는 시나리오는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듯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은 결코 중국이나 북한이 주도할 수 없을 것이다. 평화의 역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은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내부분열에 성공했다. 어느덧 대한민국은 소련국가 수반 한번 만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사라졌다고 선언하는 여당대표나 북한의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고 미국 외교단체에서 연설하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극심한 이념, 체제, 역사, 교과서 논쟁은 지금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를 모두 흔들고 있는 도전임에도 실은 ‘품위’ 있다고 자부하는 지성들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논제들이 되었다. 이상과 현실과 미래개척의 과제를 내입한 현실 분석과 성찰적 경험과 책임 있는 지성으로 대처하려는 세력은 찾기가 힘들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주류라 자부하건 반체제라 자부하건 북한을 다녀와서 북한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가 없고(보복에 대한 공포때문이건 대북 아첨 때문이건) 대한민국의 국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지성이 드므니 패거리 정치의 레토릭대상이 된 이념, 체제, 역사, 교과서 논쟁은 국가분열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II. 통일과 평화

(1) 통일과 평화 논의 양극화와 애매모호화

어느덧 우리안의 논의는 ‘통일’을 말하면 전쟁세력, 호전세력, 냉전수구세력으로 몰리고 ‘평화’를 말하면 친북, 중북, 좌파로 간주되는 음산한 경향이 생겼다. 마치 ‘평화를 위한 통일’은 없고 ‘통일을 위한 평화’는 불가능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생겨나고 있다. 더 나아가 돈으로(북한에 돈 주고) 평화를 살 수 있고 돈 때문에(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남북 통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사실상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30배가 넘는 엄청난 격차가 있으니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개발에도 제재할 필요 없이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제 제1주의 평화, 통일 논의는 ① 북한체제 옹호, 무조건 북한 돕기 위한 위장논리이거나 ② 분단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기득권자들(경제주의자들과 특정 ‘햇볕’ 체일주의자들)의 가치관 반영이거나 ③ 한반도에서의 평화, 분단문제의 복잡성, 국제성, 역사성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게으름이거나 ④ 북핵실험으로 통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니 통일 비용 쓸 필요가 없어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외국경제 전문가의 견해처럼 통일, 안보라는 국가이익과 한민족의 역사적 비존이 살아진 접근이다.

북한은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못한다는 희망적 견해로부터 북한의 핵은 곧 통일이 되면 한민족의 것이니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는 견해까지 흘러 다닌다. 통일, 평화, 안보, 안전, 복지, 사회공동체(국가, 민족, 지구촌)에 대한 통섭적, 포괄적 이해가 결여된 단편적 주장들이다. 자기편견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비합리적 논리들이다. 정치적 이해관계 위에서 아집의 판단을 먼저하고 논리를 짜 붙이는 반(反)논리가 풍미하고 있다.

III. 통일과 평화의 보편성

(1) 평화국가만이 평화를 만든다.

세계평화포럼이 발간하는 세계평화지수는 평화의 내용을 ‘전쟁의 반대개념’으로서의 군사안보 평화뿐 아니라 이에 ‘제반 사회적 갈등의 해소상태’를 지칭하는 종합적 평화로 잡고 있다. 평화의 개념도 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개념을 넘어 자유, 평등, 정의, 환경보호, 안전 같은 제반가치에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적극적 개념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구조적, 제도적 폭력과 관련된 요소, 평화문화에 관련된 요소들을 보다 중요시 하고 있다. 이 같은 평화개념을 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을 합산하여 종합지수로 ‘세계평화지수’(World Peace Index)를 만들었다.

지난 10년간의 평화지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평화는 교육, 소득과 정치 시민 자유의 높은 수준과 주변국의 평화조건이 높을 때 즉 시민과 사회공동체의 제도적 평화 수준과 지역안보 평화 수준이 높을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 WPI'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종합지수에서는 47위로서 아시아권에서는 일본(14위), 싱가포르(33위), 말레이시아(45위) 이어 4위의 평화국가이다. 즉 항상적 상위국가(북유럽과 유럽 선진국 그리고 세계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중남미 라틴 문화국가)를 제외하고는 평화상위국가에 속한다. 여기서 76국가 중 47위가 왜 상위냐는 의문이 나올 것이다.

정치외교와 정치부문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별 통계가 140개 국가까지 커버할 수가 있는데 갈등구조와 사회통합의 현실과 제도를 살필 수 있는 사회경제 부문 통계는 실패한 국가, 1인 독재국가, 내란국가, 미개발 저개발 국가일수록 통계가 없거나 이들 국가발표 통계의 신빙성이 없어 76개국으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종합지수상 76등으로 가장 덜 평화적인 것으로 나타난 파키스탄의 평화상태는 객관적 사회경제 부문 통계산출이 불가능한 나머지 64개국 보다는 더 평화적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남북한의 평화상태를 보면 정치에서 한국 31위, 북한 92위, 군사외교에서는 한국 127위, 북한 137위이고 사회경제 부문은 한국이 34위로 일본보다 앞서 아시아 최고를 자랑하고 있지만 북한은 통계 미비와 불신의 범주에 들어가 종합비교가 불가능하다. 만일 북한요소로 인한 평화감점 요인만 없었더라면 즉 군사외교 부문이 정치 31위, 사회경제 34위 수준으로까지 상승할 수 있었더라면 한국의 평화지수는 2차대전 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 수준의 평화상태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군사외교 분야의 평화지수는 주변국의 긴장 때문에 또는 군사적 개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하락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와 정치의 평화상태가 하위수준인 국가는 군사외교 부문만 평화롭다해서 진정한 평화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10년간 지수 흐름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덜 교육받은 시민, 세계를 잘 모르고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는 국민, 억압받고 자유 없는 백성, 더 가난한 나라, 실패국가, 국제적으로 경멸받고(permanent beggar) 불신 받는 나라가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지역통합, 국가통합, 민족통합을 지향하려면 더욱 평화롭고 더욱 평화수준이 높은 단위가 덜 평화로운 지역, 시민, 공동체를 이끌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남북한은 동족, 동포이며 긴 역사에서 보면 분단은 60년에 불과하다. 남북통일과 평화의 주체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통일을 위한 평화역량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단층에서 가교로-한반도통일 없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없다

기존 군사안보 중심의 평화 개념이나 전략, 즉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는 주변 4대강국은 한반도의 분열, 분단된 상태가 각각의 안보이익에 최적의 상태가 될 것이다. 주변 4대국가의 주체적 입장에서 한반도 당사국을 다루는데는 통일된 강력한 하나의 객체보다 분열, 분단된 객체가 다루기 손쉽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일본의 경우 그러하고 그런 국가심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과거역사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그런 분단의 시도가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한반도에서의 평화(안보)와 통일(분단)의 과제인 것이다.

1953년 휴전 이후 오늘까지 58년간의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상태는 140년 가까운 개화, 근대화 시간의 역사에서 가장 긴 평화기간이다. 이 땅에서 분열, 분단이 시도되는 상태는 임진왜란 때나 한말 청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의 대결 때나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충돌때나 모두 동북아시아 지역이 비평화, 반평화적이었었다. 그래서 마치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 단층(fault)지역처럼 여겨졌다. 58년간의 전쟁 없는 평화도 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밀도가 높은 휴전선(DMZ)이 존재하는 가(假)평화, 준(準)평화, 의사(擬

似)평화일 뿐 정착된 평화가 아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평화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적극적 평화개념의 사상 제도 구조 확립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는 귀중한 자산이다. 21세기형 평화와 통일의 기반, 하부구조가 되었다. 평화통일의 역량이 되었다. 시민자유, 언론자유, 확보, 정치민주화, 교육·과학기술의 선진화, 소득과 산업구조의 근대화, 법치의 제도화, 문화 예술 종교의 개방, 인재의 해외진출, 반기문, 백남준, 신경숙, 고은, 조수미, 김연아, 한류...기독교·불교·원불교의 해외선교, 새마을 신명회 굳네이버스 국제기아대책의 해외자원봉사 등 1945년 이후 독립한 제3세계 국가 중 외국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최초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DAC 멤버)로의 격상, G20정상회의 개최 등은 가장 확실한 연성력(soft power)이며 비전통적 평화역량이기도 하다.

이 점이 과거 명(明) 청(淸)과 왜(倭) 사이의 조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조선, 1990년대 이전 즉 냉전국제질서하의 미국과 소련사이의 대한민국과 21세기 대한민국이 확연히 다른 것이다. 반대로 북한은 평화역량보다 전쟁역량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비(非)대칭성이 절대적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적극적 평화역량은 이제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세력간에 충돌하는 단층의 운명적 지리 결정론에서 해방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 지역평화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통일'의 수렴, 승화의 출발점은 이 대한민국의 평화역량의 충실에 있다.

(3) 대한민국 평화역량의 완성-세계평화 창조자의 길

「인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며, 동시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만일 세계의 모든 정치인, 경제인, 과학자, 교육자, 예술가, 노동자, 군인 그리고 종교인까지도 모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 같은 깊이를 깨닫고, 각기 깨닫고, 각기 맡은 분야에서 이 인간을 목적으로 하여 봉사한다면 동서 양진영의 대립, 제3세계의 빈곤과 기아문제, 핵문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분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이 이룩될 것은 물론입니다.」

「한반도의 분열과 적대가 오직 외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모든 불화의 원인은 외부 못지않게 자기 안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 불신과 미움을 스스로 제거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 이 땅의 평화는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오히려 한반도가 바로 여기 이 땅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난관을 이기고 평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세계평화의 발원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8년 11월 25~26일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가 발족하면서 주최한 「한국인의 평화철학과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방법」 학술회의에서의 김수환 추기경 기조연설이다. 20세기 많은 식민지 독립운동 중에서도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히 안중근과 3. 1 독립선언에서 선명한 동양평화, 보편적 세계평화의 주역됨의 염원이 그대로 연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나는 「平和論理와 安保論理」를 발표하고 '목적과 수단이 평화로운 평화국가 지향을 위한 인류복지세계안'을 제기했다. '국제화, 세계화, 민족공동 과제의 공동협력에 의한 해결접근 또 그런 지향과 노력'이 안보의 수단 논리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화적 수단'의 의지와 프로

그럼 실천은 곧 인간화·민주화·개방화·국제화·인류화로의 길이다. 남북통일도 바로 이러한 안으로의 인간화·민주화의 충실을 거쳐 밖으로 안과 똑같은 개방화·국제화·인류화의 길을 걸을 태세가 돼 있을 때 이질성극복이 가능해지고 통일이 실천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질성의 극복 없이 통일은 불가능해지고 평화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남북 모두 안보논리로 통일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는 스위스모델 즉 목적과 수단이 평화적인 적십자운동 그리고 인종, 언어, 종교가 다양하고 내전까지 겪었으면서 안으로 통일, 화합하고 밖으로 무장중립을 실현하고 지키는 스위스를 모델로 하는 평화와 안보논리의 수렴, 극복, 통합을 그렸다. 그리하여 ‘21c 한국판 세계적십자’ 운동으로 인류복지세(Global Welfare Tax)를 제안했다. ①1인당 자원 소비가 높은 나라 ②군비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나라 ③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 ④자원의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 ⑤인구가 많은 나라 ⑥인구의 대외이동이 높은 나라일 수록 GWT를 더 많이 징수하는 UN주관하의 보편세를 창설하자는 제안이다.

오늘의 통일세 논의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기금은 물론 제3세계 후진국 원조도 OECD DAC체제나 UNDP, 세계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주도하는 GWT 프레임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더라면 대내 국민협조나 대북 설득력에서 훨씬 효과적이고 보편적 가치의 우위를 가졌을 것이다.

휴전선을 UN 관리하의 국제평화지역(World Peace Zone)으로 변경, UN기관과 UN 관련 회의장으로 활용하는 제안도 통일과 평화를 통합, 수령하는 정책의 하나일 수 있다(2008. 10. 23, DMZ 보전국제컨퍼런스 기조발표).

IV. 맺음-평화, 통일 논의 사용화(privatization)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누구나 말로는 평화를 희생한 통일도 통일을 희생한 평화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종합평화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3대 세습 체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평화, 즉 단순히 전쟁을 회피하는 평화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안보, 자유, 평등, 정의, 안전, 복지, 환경보호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리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적극적 개념의 평화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현상변경 없이 북한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조지 오웰의 ‘1948년’, 3대 세습 1인정권, 신권정치의 현상변경이 북한의 평화,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다. 통일은 평화목표 달성의 과정이면서 목표가 된다. 중국의 변화가능성도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

그간 안보개념의 변화도 평화와 통일논리 설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전쟁 안보의 개념이 지상전, 살상전, 상호확증파괴(MAD)에서 비상살상전(non-killing war), 목표선택 타격, 네트워크 동원전쟁, 제4세대 전쟁으로 변질 되었다. 사이버전쟁, 과학기술 전쟁과 테러를 포함한 비대칭 전술이 공존하는 안보조건이 전개되고 있다. ‘인간 안보’의 개념도 새로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적극적 평화능력과 안보개념의 변화는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통일을 위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통일의 가능성, 대한민국의 대륙과 해양의 교량역할, 세계평화창조의 역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지나간 20년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평화역량=통일역량의 성장을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자기 권력을 위하여,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私用)했기 때문에 능력향상의 실체와 반대로 이 땅,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시민 국민 민족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한 평화와 통일의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私用), 악용하는 정치권력, 기

업, NGO 뿐 아니라 이 역행을 막아야 할 지성까지도 이들에 동조, 포퓰리즘화로 치달거나 침묵해 왔다.

대한민국의 성장한 평화역량을 어떻게 사용화를 막고 평화와 통일 실현을 위한 전략, 비준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초점을 맞추어 행사할 수 있느냐가 지금부터의 과제이다. 이 땅에서 평화나 통일을 말하는 이들은 그 누구건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를 자문하고 도덕적 순수성에서 참된 신앙인의 경지, 참선의 경지에 이르려는 순수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부록>

<표 1> 세계평화지수 2010: 76개국

2010 순위	국가	2010평화지수	정치평화지수	군사외교평화지수	경제사회평화지수	2009 순위	2008 순위	2007 순위	2006 순위	2005 순위	2004 순위	2003 순위	2002 순위	2009평화지수	2008평화지수	2007평화지수	2006평화지수	2005평화지수	2004평화지수	2003평화지수	2002평화지수
1	네덜란드	90.2	98.7	87.5	84.3	4	3	11	10	5	5	6	11	89.4	88.3	85.9	86.2	87.5	86.3	86.2	85.5
2	스웨덴	90.0	98.9	89.2	81.8	1	1	1	2	2	1	1	1	90.7	90.4	90.0	90.3	90.3	89.6	88.5	89.2
3	덴마크	89.9	99.2	86.8	83.6	2	11	2	7	1	2	2	3	90.3	85.8	88.1	87.5	90.3	87.3	88.0	87.8
4	스위스	89.5	98.3	89.0	81.3	3	2	5	3	3	7	8	6	89.5	89.4	87.4	89.1	89.6	85.9	85.6	86.6
5	노르웨이	89.1	98.4	80.7	88.0	8	6	4	6	6	11	3	2	87.8	87.4	87.5	87.6	87.4	84.4	87.6	88.6
6	독일	88.8	94.5	91.1	80.9	5	7	6	4	7	6	10	7	88.9	87.3	87.4	88.1	87.1	86.2	85.3	86.4
7	캐나다	88.0	98.3	85.3	80.4	9	8	10	5	11	3	4	9	87.4	86.8	85.9	87.9	84.9	86.9	86.9	86.0
8	오스트리아	87.9	97.3	87.3	79.0	6	5	8	1	4	9	7	8	87.8	87.6	86.2	90.3	87.6	85.2	85.9	86.2
9	호주	87.3	97.4	85.7	78.7	10	4	3	11	17	22	11	14	87.1	87.7	87.8	85.3	82.6	78.8	85.3	83.8
10	아일랜드	86.7	96.7	82.0	81.4	12	12	13	12	13	13	12	16	86.4	85.2	85.0	85.0	84.1	84.0	83.9	82.6
11	코스타리카	86.6	91.5	87.4	80.9	20	20	17	18	18	18	20	18	82.9	81.7	82.2	82.0	82.5	80.8	80.2	81.9
12	핀란드	85.8	98.8	78.5	80.1	7	13	12	8	12	14	14	10	87.8	85.1	85.1	86.6	84.9	83.4	83.0	85.5
13	스페인	84.7	89.3	83.6	81.1	32	23	15	16	45	53	24	21	78.8	80.8	82.7	82.9	72.7	68.6	77.7	80.2
14	일본	84.4	86.2	91.6	75.4	23	16	16	20	19	10	13	25	81.5	82.7	82.6	81.7	82.3	84.5	83.6	79.2
15	우루과이	83.8	92.6	80.5	78.2	18	24	26	29	22	23	22	23	83.1	80.7	79.0	78.5	80.1	78.6	78.7	79.5
16	폴란드	83.5	87.3	86.4	76.7	16	25	29	22	20	48	21	30	84.2	80.7	78.8	80.9	81.3	69.9	79.1	75.5
17	포르투갈	83.5	91.8	84.5	74.0	15	14	9	15	15	16	16	17	84.4	85.0	86.2	84.1	83.5	82.7	82.8	82.1
18	슬로베니아	83.4	96.2	79.0	75.1	17	15	19	14	16	15	18	20	83.5	84.7	81.8	84.5	83.2	83.2	82.3	81.2
19	벨기에	83.3	87.8	82.4	79.8	21	10	14	13	10	12	15	13	82.3	85.9	84.4	84.8	85.0	84.1	82.8	84.3
20	체코	83.2	90.3	78.0	81.2	22	19	20	19	23	24	29	19	82.2	81.7	81.5	81.9	80.0	77.8	77.1	81.3
21	룩셈부르크	82.6	98.0	78.8	71.1	14	31	24	27	9	8	9	4	84.5	78.9	80.3	80.2	85.8	85.9	85.4	86.8
22	이탈리아	82.3	83.2	88.5	75.3	33	17	21	24	14	21	17	15	78.4	82.4	81.4	80.8	83.8	79.3	82.4	83.0
23	영국	81.5	96.6	69.5	78.3	26	18	18	17	52	40	25	24	80.4	81.7	82.0	82.6	69.2	71.3	77.7	79.3
24	리투아니아	81.5	87.2	79.7	77.4	29	28	32	30	39	26	31	33	79.1	80.1	77.4	77.6	73.6	77.5	76.5	76.7
25	파나마	81.2	87.8	81.8	74.1	19	22	22	26	28	28	27	29	82.9	80.9	80.5	80.3	77.3	77.2	77.4	77.7
26	자메이카	81.2	84.8	83.4	75.5	28	34	38	28	26	27	26	27	80.2	78.1	75.0	78.6	78.7	77.3	77.7	77.9
27	뉴질랜드	81.0	84.8	83.9	74.3	11	9	7	9	8	4	5	5	86.7	86.3	86.8	86.4	86.7	86.7	86.8	86.6
28	칠레	81.0	92.1	77.1	73.7	24	33	23	25	24	20	30	26	81.1	78.4	80.3	80.7	79.7	79.5	77.0	78.8
29	불가리아	80.7	90.3	77.2	74.5	27	26	25	23	35	46	43	35	80.4	80.3	80.1	80.9	74.6	70.2	72.4	74.4
30	브라질	80.2	86.3	79.5	74.7	25	32	31	38	31	35	39	38	80.4	78.7	78.3	75.2	75.6	73.1	73.8	73.6
31	알바니아	79.8	82.0	77.8	79.6	35	44	40	43	47	55	46	45	77.9	73.9	74.5	73.7	72.4	68.0	70.6	71.5
32	멕시코	79.5	81.2	78.3	79.0	37	49	53	33	29	25	23	31	77.8	72.2	69.6	76.7	76.9	77.5	78.6	77.4
33	싱가포르	79.3	87.3	69.5	81.2	34	42	43	39	34	31	38	41	78.1	74.3	74.1	75.0	75.0	74.1	72.7	72.7

34	아르헨티나	79.2	77.2	78.2	82.0	43	36	46	45	38	37	51	53	75.8	76.1	72.0	72.9	73.8	72.5	68.5	68.2
35	루마니아	79.0	77.1	82.8	77.1	48	43	41	42	37	39	40	47	73.8	74.0	74.2	74.4	74.2	71.7	73.7	71.1
36	우크라이나	78.9	84.4	75.8	76.5	31	45	33	41	44	45	50	58	78.8	73.9	76.9	74.9	72.9	70.2	69.4	65.5
37	모리셔스	78.8	93.0	82.9	60.5	36	27	30	31	27	29	33	22	77.8	80.1	78.3	77.3	77.9	77.0	75.6	79.8
38	헝가리	78.7	77.2	84.1	74.8	13	21	28	21	21	19	19	32	84.8	81.3	78.9	81.1	81.3	80.6	80.2	77.2
39	트리니다드 토바고	78.5	86.4	76.5	72.5	30	30	37	32	30	30	32	28	79.1	79.5	75.5	77.2	76.3	76.4	76.2	77.7
40	튀니지	78.1	82.0	76.9	75.5	38	38	36	37	36	34	36	40	77.0	75.4	75.7	75.2	74.4	74.0	74.5	72.9
41	프랑스	77.6	80.8	71.5	80.5	42	40	49	40	25	17	28	12	75.9	74.9	71.5	75.0	79.3	81.4	77.3	84.4
42	카자흐스탄	77.0	82.5	75.9	72.7	46	52	51	50	42	38	53	44	74.7	70.4	70.1	70.9	73.1	71.8	67.2	71.5
43	크로아티아	77.0	72.7	78.2	80.1	39	35	34	44	41	36	49	55	76.9	76.1	76.6	73.5	73.1	72.6	69.9	67.4
44	벨로루시	76.7	79.4	77.1	73.8	55	54	48	48	32	33	42	37	71.4	69.3	71.8	71.5	75.3	74.5	73.1	73.9
45	말레이시아	76.0	74.4	76.0	77.6	40	41	39	34	48	42	47	51	76.9	74.8	74.8	76.6	72.2	71.1	70.4	70.1
46	베네주엘라	75.9	75.2	76.6	75.9	41	56	35	54	57	47	41	46	75.9	67.0	75.9	69.5	67.9	70.1	73.5	71.3
47	한국	75.7	88.2	63.4	75.6	45	37	42	36	46	43	54	48	75.3	76.0	74.1	75.3	72.5	71.0	66.8	70.4
48	엘살바도르	75.2	73.1	82.1	70.3	50	48	50	46	55	41	48	50	73.7	72.5	70.7	72.6	68.4	71.3	70.0	70.4
49	터키	75.0	74.2	76.6	74.1	66	68	64	59	62	71	57	62	60.9	57.1	61.4	65.2	62.8	53.5	64.3	60.9
50	그리스	74.6	70.1	72.4	81.3	53	29	27	35	33	32	37	34	72.4	79.6	78.9	75.6	75.2	75.3	74.3	74.4
51	에콰도르	73.8	75.1	76.0	70.4	47	50	54	52	43	44	44	42	74.1	70.7	69.3	70.3	72.9	70.7	71.8	72.2
52	미국	73.2	81.4	62.9	75.2	51	46	45	47	51	51	45	54	73.0	73.3	72.7	72.5	71.2	69.2	71.7	68.2
53	남아공	72.7	75.8	83.5	58.7	44	47	44	49	49	49	52	39	75.4	73.2	73.2	71.4	71.9	69.8	68.1	73.3
54	볼리비아	70.8	63.6	79.9	69.0	54	51	57	57	40	52	35	36	71.7	70.5	67.1	67.1	73.6	69.0	74.7	74.0
55	케냐	70.7	77.9	76.3	58.0	62	61	56	56	53	56	56	56	65.1	63.6	67.1	69.1	68.6	67.3	66.2	66.3
56	태국	69.3	63.6	66.7	77.5	59	39	47	51	50	50	34	49	66.5	74.9	71.9	70.3	71.7	69.5	74.7	70.4
57	모로코	69.2	79.6	62.6	65.4	60	59	58	60	59	61	64	59	66.3	65.4	65.5	65.2	65.1	64.6	61.4	63.5
58	요르단	68.1	74.4	56.3	73.7	57	53	55	58	58	60	60	61	68.1	70.1	69.2	67.0	65.9	64.7	62.7	61.3
59	이집트	67.6	72.7	65.6	64.4	63	63	71	72	63	64	61	60	63.8	62.7	55.7	56.8	61.6	58.6	62.0	61.6
60	니카라과	67.4	51.8	84.6	65.9	52	55	61	55	54	58	65	52	72.8	68.6	64.4	69.1	68.4	65.8	60.7	69.3
61	페루	66.3	57.9	72.0	69.1	56	58	59	62	56	54	55	43	70.2	66.7	65.4	63.7	68.1	68.4	66.3	72.2
62	방글라데시	65.9	62.6	76.8	58.4	58	60	65	65	65	59	63	68	66.6	63.6	59.9	60.2	60.0	64.9	61.5	54.7
63	인도네시아	65.9	51.1	80.7	65.9	64	62	60	64	69	66	70	67	62.4	63.3	64.6	60.7	55.8	57.4	57.7	56.5
64	콜롬비아	65.8	54.8	74.0	68.7	69	71	70	71	60	65	67	63	58.8	54.9	55.8	57.2	64.7	58.5	58.6	59.9
65	중국	64.8	51.1	69.2	74.2	65	65	63	61	61	57	58	57	62.0	59.2	62.3	64.3	64.4	66.4	64.1	66.1
66	필리핀	64.6	37.8	78.0	77.9	68	66	62	69	71	68	69	69	59.2	58.3	64.2	59.2	55.3	56.5	57.7	53.6
67	러시아	63.4	48.7	75.6	66.0	49	64	72	74	68	67	68	72	73.8	62.5	55.3	54.3	56.3	57.4	57.8	51.6
68	이스라엘	62.7	73.4	44.2	70.6	61	57	52	53	70	62	66	64	65.5	66.8	69.8	69.8	55.7	62.1	59.2	59.1
69	인도	61.5	61.3	62.2	60.9	75	75	76	70	66	69	72	71	51.8	48.0	46.3	59.1	60.0	54.6	50.9	52.1
70	짐바브웨	61.3	55.3	74.6	54.0	70	70	67	68	72	70	62	65	57.2	55.5	58.9	59.4	54.9	54.2	61.6	56.7
71	시리아	57.7	58.9	48.8	65.5	71	74	74	73	76	75	73	73	55.6	51.0	51.5	54.7	43.2	44.9	48.3	51.2
72	나이지리아	57.5	35.4	80.9	56.1	73	73	73	75	74	73	-	-	54.2	51.8	52.4	50.2	49.9	52.0	-	-
73	이란	57.0	34.8	58.9	77.2	67	67	68	63	67	74	-	-	60.3	58.3	58.2	62.5	59.6	51.4	-	-
74	스리랑카	54.9	19.6	78.7	66.3	74	72	66	66	64	63	59	66	53.6	53.3	59.1	59.9	60.2	61.6	63.4	56.7
75	알제리	53.5	14.9	73.0	72.4	72	69	69	67	73	72	71	70	55.0	55.8	57.2	59.6	54.3	52.4	51.2	53.3
76	파키스탄	46.5	35.7	55.9	47.9	76	76	75	76	75	76	74	74	45.7	44.9	51.4	47.0	47.7	43.1	43.3	36.7

<표 2> 정치 부문 세계평화지수 2002~2010: 140개국

순위	국가	2010 정치	2009 정치	2008 정치	2007 정치	2006 정치	2005 정치	2004 정치	2003 정치	2002 정치	10-09 변화	09-08 변화	08-07 변화	07-06 변화	06-05 변화	05-04 변화	04-03 변화	03-02 변화
1	덴마크	99.2	99.2	93.8	99.4	99.4	99.4	99.4	99.4	99.4	0.0	5.4	-5.7	0.0	0.0	0.0	0.0	0.0
2	스웨덴	98.9	99.0	99.0	98.9	98.9	98.9	99.0	99.0	98.7	-0.1	0.0	0.1	0.0	0.0	-0.1	0.0	0.3
3	핀란드	98.8	99.3	99.3	99.6	99.6	99.7	99.7	96.6	99.9	-0.5	0.0	-0.2	0.0	-0.1	0.0	3.1	-3.3
4	네덜란드	98.7	96.8	98.0	98.4	95.2	98.4	98.7	98.8	98.6	1.9	-1.2	-0.5	3.3	-3.3	-0.3	-0.1	0.2
5	노르웨이	98.4	97.7	98.6	98.7	98.8	98.8	98.7	95.3	95.4	0.7	-0.9	-0.1	-0.1	0.0	0.1	3.4	-0.1
6	캐나다	98.3	98.3	98.3	98.1	98.0	98.1	98.3	98.7	98.5	0.0	0.0	0.2	0.1	-0.1	-0.2	-0.3	0.1
7	스위스	98.3	98.7	98.7	98.8	98.8	98.8	98.4	95.1	98.0	-0.4	0.0	-0.1	0.0	0.0	0.4	3.4	-2.9
8	룩셈부르크	98.0	98.1	98.2	98.4	98.3	98.2	98.6	98.9	98.6	-0.1	-0.1	-0.2	0.1	0.1	-0.4	-0.3	0.3
9	호주	97.4	97.4	97.3	97.4	97.5	86.4	86.4	97.3	97.2	0.0	0.1	-0.1	-0.1	11.1	0.0	-10.9	0.1
10	오스트리아	97.3	97.5	97.5	98.1	98.2	97.9	97.4	97.2	97.2	-0.2	0.0	-0.6	-0.1	0.3	0.5	0.2	0.0
11	바하마	96.9	96.4	90.9	95.3	94.4	96.1	90.2	90.9	92.2	0.5	5.6	-4.4	0.9	-1.7	5.9	-0.8	-1.3
12	아일랜드	96.7	96.8	96.5	96.4	96.4	96.5	96.1	95.4	96.5	-0.1	0.2	0.1	0.0	-0.1	0.4	0.7	-1.1
13	영국	96.6	97.4	97.4	97.6	97.6	71.2	75.9	88.1	87.6	-0.8	0.0	-0.2	0.0	26.5	-4.7	-12.2	0.5
14	슬로베니아	96.2	96.3	96.2	96.0	95.7	95.6	95.4	94.6	93.7	-0.1	0.1	0.2	0.3	0.1	0.2	0.8	0.9
15	에스토니아	95.8	95.8	95.6	95.9	95.5	95.1	93.6	93.7	93.7	0.0	0.1	-0.2	0.3	0.4	1.5	-0.1	0.0
16	몰타	94.7	94.5	94.5	95.2	95.4	95.7	95.0	94.9	98.5	0.2	0.0	-0.7	-0.2	-0.2	0.7	0.1	-3.6
17	독일	94.5	94.4	94.3	94.5	94.7	97.8	97.2	92.8	96.0	0.1	0.1	-0.2	-0.2	-3.0	0.6	4.4	-3.1
18	모리셔스	93.0	93.0	92.2	92.6	91.6	92.4	92.6	92.7	92.7	0.0	0.9	-0.4	1.0	-0.8	-0.2	-0.1	0.0
19	우루과이	92.6	92.8	92.6	92.3	91.7	92.1	91.3	90.8	90.8	-0.2	0.2	0.3	0.6	-0.3	0.8	0.4	0.0
20	아이슬란드	92.2	87.2	98.6	99.1	99.2	99.0	99.1	98.9	98.6	5.0	-11.4	-0.4	-0.1	0.2	-0.1	0.2	0.2
21	칠레	92.1	92.4	86.9	92.8	92.8	92.9	92.9	91.2	91.2	-0.3	5.4	-5.9	0.0	-0.1	0.0	1.7	0.0
22	포르투갈	91.8	92.2	92.6	92.7	92.6	92.4	92.7	92.4	92.4	-0.4	-0.4	-0.1	0.1	0.2	-0.3	0.3	0.0
23	코스타리카	91.5	85.2	85.1	87.2	87.3	88.0	86.4	83.6	86.7	6.3	0.1	-2.0	-0.1	-0.8	1.6	2.8	-3.0
24	나미비아	91.1	91.1	91.1	90.7	90.9	89.7	90.4	91.5	88.2	0.0	0.0	0.4	-0.2	1.1	-0.7	-1.1	3.4
25	보츠와나	90.7	91.7	91.2	91.4	91.8	91.9	89.2	93.0	92.5	-1.0	0.4	-0.2	-0.3	-0.1	2.7	-3.8	0.4
26	슬로바키아	90.4	91.0	90.8	90.6	90.2	89.8	88.6	91.6	91.6	-0.6	0.1	0.2	0.4	0.3	1.2	-3.0	0.0
27	불가리아	90.3	90.7	91.6	91.5	91.6	85.5	85.3	84.5	87.4	-0.4	-0.9	0.1	-0.1	6.1	0.2	0.8	-2.9
28	체코	90.3	85.4	90.9	90.5	89.9	89.8	88.6	85.3	88.6	4.9	-5.6	0.4	0.6	0.1	1.2	3.3	-3.3
29	스페인	89.3	84.1	84.4	90.0	90.1	73.7	62.4	86.9	92.4	5.2	-0.2	-5.7	-0.1	16.4	11.3	-24.5	-5.4
30	대만	88.5	86.2	87.1	83.0	82.4	93.0	88.7	92.6	92.9	2.3	-0.9	4.1	0.6	-10.7	4.3	-3.8	-0.3
31	한국	88.2	83.1	82.5	88.1	87.9	87.4	86.2	86.5	86.1	5.1	0.6	-5.6	0.1	0.6	1.2	-0.2	0.3
32	가나	88.1	88.8	88.6	88.1	88.4	87.5	87.2	87.0	83.4	-0.7	0.2	0.4	-0.2	0.8	0.3	0.3	3.6
33	벨기에	87.8	82.5	93.4	93.6	93.7	93.8	97.0	92.5	94.9	5.3	-10.9	-0.2	-0.1	-0.1	-3.2	4.5	-2.5
34	파나마	87.8	87.8	87.6	87.5	87.9	80.0	79.8	81.4	79.0	0.0	0.2	0.1	-0.4	7.9	0.2	-1.6	2.4
35	폴란드	87.3	89.9	89.5	88.9	88.5	88.7	76.8	88.3	88.4	-2.6	0.4	0.6	0.4	-0.2	11.9	-11.6	-0.1
36	싱가포르	87.3	88.3	88.4	88.5	88.5	88.4	88.0	87.0	86.8	-1.0	-0.1	-0.1	0.0	0.1	0.4	1.0	0.1
37	리투아니아	87.2	86.9	87.1	87.1	87.1	79.5	86.6	89.2	92.3	0.3	-0.2	0.0	0.0	7.6	-7.1	-2.6	-3.0
38	말라위	86.5	78.2	78.1	79.0	78.2	78.2	80.4	83.1	86.4	8.3	0.1	-0.9	0.8	0.0	-2.2	-2.6	-3.4
39	트리니다드토바고	86.4	86.3	86.1	85.8	85.6	85.1	85.4	84.8	89.2	0.1	0.2	0.2	0.3	0.5	-0.3	0.6	-4.4
40	브라질	86.3	86.0	86.0	85.8	86.3	85.6	80.0	82.2	76.7	0.3	0.0	0.2	-0.4	0.7	5.6	-2.2	5.6
41	일본	86.2	85.3	85.5	85.6	90.9	90.4	91.3	91.4	91.4	0.9	-0.2	-0.1	-5.2	0.4	-0.9	-0.1	0.0
42	쿠웨이트	85.8	86.7	86.7	87.3	86.2	86.1	86.9	92.4	93.2	-0.9	0.0	-0.6	1.0	0.1	-0.8	-5.5	-0.8
43	몽골	85.6	75.5	86.6	80.9	86.6	86.6	88.6	84.1	85.5	10.1	-11.1	5.8	-5.8	0.0	-2.0	4.5	-1.4
44	세네갈	85.5	86.0	87.1	86.8	86.7	86.4	86.7	84.7	84.5	-0.5	-1.1	0.3	0.1	0.2	-0.3	2.0	0.2
45	말리	85.0	85.4	84.9	86.0	75.5	75.7	77.5	84.6	83.5	-0.4	0.4	-1.0	10.5	-0.2	-1.8	-7.1	1.1
46	뉴질랜드	84.8	99.1	99.2	99.4	99.4	99.4	99.3	99.3	99.2	-14.3	-0.1	-0.2	0.0	0.0	0.1	0.0	0.1
47	자메이카	84.8	84.8	85.0	85.5	85.4	85.0	85.5	82.6	87.8	0.0	-0.2	-0.4	0.1	0.3	-0.5	2.8	-5.2

48	우크라이나	84.4	84.7	79.4	85.0	84.8	77.0	76.1	67.7	67.3	-0.3	5.3	-5.7	0.2	7.9	0.9	8.5	0.3
49	아랍에미레이트	83.8	83.4	83.4	83.9	76.3	81.3	80.5	91.5	92.4	0.4	0.0	-0.6	7.6	-5.0	0.8	-11.0	-0.9
50	이탈리아	83.2	78.2	85.1	84.8	84.9	93.8	88.3	90.2	90.6	5.0	-6.9	0.3	-0.1	-8.9	5.5	-2.0	-0.3
51	카자흐스탄	82.5	82.0	81.8	82.4	82.0	81.2	80.3	77.2	80.7	0.5	0.1	-0.6	0.4	0.8	0.9	3.1	-3.5
52	알바니아	82.0	82.2	84.7	84.3	84.1	83.3	84.2	83.3	83.6	-0.2	-2.5	0.3	0.2	0.8	-0.9	0.9	-0.3
53	튀니지	82.0	82.2	82.0	83.4	83.7	83.8	83.7	83.6	81.1	-0.2	0.2	-1.4	-0.3	-0.1	0.1	0.1	2.5
54	미국	81.4	82.9	82.8	81.7	81.9	81.9	70.6	78.9	77.2	-1.5	0.1	1.1	-0.2	0.0	11.3	-8.3	1.8
55	멕시코	81.2	81.5	75.8	64.5	82.3	85.5	85.5	87.6	81.6	-0.3	5.7	11.3	-17.8	-3.1	0.0	-2.1	5.9
56	프랑스	80.8	80.8	70.2	75.8	75.9	93.2	92.9	88.8	94.8	0.0	10.7	-5.7	-0.1	-17.2	0.3	4.1	-6.0
57	파푸아뉴기니	80.8	80.6	81.5	78.9	79.6	79.2	78.2	79.5	84.7	0.2	-0.9	2.6	-0.7	0.5	1.0	-1.3	-5.2
58	파라과이	80.3	80.6	74.6	74.8	74.2	74.0	63.7	64.3	77.5	-0.3	6.1	-0.2	0.6	0.2	10.3	-0.7	-13.1
59	토고	79.9	78.9	78.5	77.6	65.9	79.3	79.3	78.8	74.0	1.0	0.4	0.8	11.7	-13.4	0.0	0.5	4.8
60	오만	79.9	81.4	78.6	79.4	80.4	79.4	79.0	84.9	91.5	-1.5	2.7	-0.8	-1.0	1.0	0.4	-6.0	-6.6
61	바레인	79.7	80.9	83.5	83.4	84.4	83.6	83.6	87.0	89.6	-1.2	-2.6	0.0	-0.9	0.8	0.0	-3.4	-2.6
62	잠비아	79.7	79.6	78.4	73.4	83.6	83.6	84.3	83.4	83.4	0.1	1.1	5.1	-10.2	0.0	-0.7	0.8	0.0
63	모로코	79.6	74.9	80.5	80.2	80.2	80.2	79.3	79.8	82.3	4.7	-5.6	0.3	0.0	0.0	0.9	-0.4	-2.6
64	카타르	79.5	77.8	77.3	77.3	78.0	76.4	76.3	81.3	84.4	1.7	0.6	0.0	-0.7	1.6	0.1	-5.0	-3.1
65	벨로루시	79.4	79.0	67.5	73.5	79.6	80.4	82.3	83.0	85.6	0.4	11.5	-6.1	-6.1	-0.8	-1.9	-0.7	-2.6
66	케냐	77.9	66.5	61.0	73.1	78.6	78.6	79.2	74.5	76.7	11.4	5.6	-12.1	-5.4	0.0	-0.6	4.6	-2.2
67	아르헨티나	77.2	71.7	77.2	77.2	74.6	80.1	74.2	61.6	60.3	5.5	-5.6	0.0	2.6	-5.6	5.9	12.6	1.3
68	헝가리	77.2	88.3	88.5	82.8	88.2	91.0	90.0	90.1	90.6	-11.1	-0.2	5.7	-5.3	-2.8	1.0	-0.1	-0.4
69	아르메니아	77.1	60.7	78.4	78.3	78.3	78.5	79.3	80.2	86.4	16.4	-17.7	0.1	0.0	-0.2	-0.8	-0.8	-6.2
70	루마니아	77.1	64.8	72.8	74.4	73.5	79.3	80.1	79.9	80.1	12.3	-8.0	-1.5	0.9	-5.9	-0.8	0.2	-0.2
71	감비아	76.9	76.7	77.5	77.7	78.0	78.6	78.2	67.4	69.5	0.2	-0.8	-0.2	-0.2	-0.6	0.4	10.8	-2.1
72	피지	76.9	77.3	77.3	71.7	80.8	83.4	79.3	80.7	79.3	-0.4	0.0	5.6	-9.1	-2.6	4.1	-1.4	1.4
73	모리타니	76.6	65.0	78.7	66.7	65.5	68.6	62.5	82.5	80.8	11.6	-13.7	12.0	1.1	-3.0	6.1	-20.0	1.6
74	카메룬	76.0	58.7	78.5	78.4	78.3	78.2	78.6	76.0	78.8	17.3	-19.8	0.1	0.1	0.1	-0.4	2.6	-2.8
75	남아공	75.8	76.0	76.6	78.7	79.5	79.6	73.3	73.7	80.3	-0.2	-0.6	-2.1	-0.8	-0.1	6.3	-0.4	-6.6
76	키르기스스탄	75.7	77.4	77.8	72.3	61.3	82.1	82.0	78.0	82.7	-1.7	-0.3	5.4	11.0	-20.8	0.1	3.9	-4.7
77	베네주엘라	75.2	76.8	65.8	77.3	60.6	61.5	67.2	75.0	71.8	-1.6	11.0	-11.4	16.7	-0.9	-5.7	-7.8	3.2
78	라트비아	75.1	86.8	86.5	87.4	89.8	91.7	91.5	91.4	91.0	-11.7	0.2	-0.8	-2.5	-1.9	0.2	0.1	0.3
79	에콰도르	75.1	74.9	69.4	69.6	69.9	80.9	75.1	75.1	75.7	0.2	5.4	-0.2	-0.2	-11.0	5.8	0.0	-0.6
80	사우디아라비아	74.9	74.5	74.4	74.3	69.6	73.5	66.3	79.8	86.7	0.4	0.1	0.1	4.7	-3.8	7.2	-13.5	-6.8
81	말레이시아	74.4	80.9	75.4	80.8	80.8	80.8	79.6	78.3	78.5	-6.5	5.6	-5.4	0.0	0.0	1.2	1.3	-0.1
82	요르단	74.4	75.9	76.3	77.0	77.5	77.0	75.3	68.6	68.0	-1.5	-0.5	-0.7	-0.4	0.4	1.7	6.7	0.5
83	터키	74.2	47.4	46.8	46.5	62.8	56.9	43.9	60.9	52.1	26.8	0.6	0.3	-16.3	5.9	13.0	-17.0	8.8
84	그루지야	74.1	62.8	67.8	57.9	62.9	61.6	66.0	70.2	63.1	11.3	-5.0	9.9	-5.0	1.3	-4.4	-4.1	7.1
85	이스라엘	73.4	74.2	73.4	74.1	73.7	61.7	71.3	74.0	92.4	-0.8	0.8	-0.7	0.5	11.9	-9.6	-2.7	-18.4
86	엘살바도르	73.1	73.7	73.8	73.8	74.0	74.0	73.5	70.1	73.3	-0.6	-0.1	0.0	-0.2	0.0	0.5	3.4	-3.3
87	이집트	72.7	67.2	72.9	56.6	56.7	73.2	66.8	72.5	75.7	5.5	-5.7	16.2	-0.1	-16.4	6.4	-5.7	-3.3
88	크로아티아	72.7	72.1	71.8	71.0	71.0	71.1	71.3	71.5	70.6	0.6	0.3	0.8	0.0	-0.1	-0.2	-0.1	0.8
89	탄자니아	71.8	72.1	72.4	69.5	69.5	78.0	77.5	73.8	68.2	-0.3	-0.2	2.9	0.0	-8.5	0.5	3.7	5.6
90	온두라스	71.0	84.1	84.0	84.0	84.1	72.7	72.7	83.3	83.3	-13.1	0.1	0.0	-0.1	11.4	0.0	-10.6	0.0
91	아제르바이잔	70.5	70.1	64.7	71.1	70.9	76.3	70.5	76.3	74.7	0.4	5.3	-6.4	0.2	-5.3	5.8	-5.8	1.5
92	북한	70.3	72.0	70.6	70.8	81.0	74.6	75.1	77.8	77.5	-1.7	1.4	-0.1	-10.3	6.4	-0.5	-2.6	0.3
93	그리스	70.1	65.9	82.5	82.3	82.1	82.1	82.1	81.1	83.0	4.2	-16.6	0.2	0.1	0.0	0.0	1.0	-1.9
94	쿠바	69.9	70.3	69.2	68.4	69.6	68.7	69.4	66.8	72.8	-0.4	1.0	0.8	-1.1	0.9	-0.7	2.6	-6.0
95	도미니카공화국	67.7	67.2	68.0	55.9	67.6	67.1	68.0	78.8	83.3	0.5	-0.8	12.1	-11.7	0.5	-0.9	-10.9	-4.4
96	몰도바	67.5	83.8	83.6	84.1	83.8	83.1	77.6	83.8	84.9	-16.3	0.1	-0.4	0.3	0.7	5.5	-6.1	-1.1
97	모잠비크	67.2	68.2	68.4	67.5	67.5	70.5	70.3	71.8	75.5	-1.0	-0.2	0.9	0.0	-3.0	0.2	-1.6	-3.7
98	라오스	65.9	66.9	66.7	66.7	67.9	68.2	58.3	65.6	64.4	-1.0	0.1	0.0	-1.2	-0.3	9.9	-7.3	1.2

99	우즈베키스탄	64.5	59.8	59.7	65.7	50.0	50.2	76.0	76.6	79.4	4.7	0.1	-6.0	15.6	-0.1	-25.8	-0.6	-2.8
100	태국	63.6	67.6	78.7	67.0	66.3	75.6	75.9	79.9	80.4	-4.0	-11.1	11.7	0.7	-9.3	-0.3	-4.0	-0.5
101	볼리비아	63.6	63.9	63.8	63.6	62.9	73.7	63.1	76.0	78.8	-0.3	0.1	0.2	0.6	-10.8	10.6	-12.9	-2.8
102	방글라데시	62.6	72.4	76.9	66.8	69.5	63.7	80.1	64.3	63.4	-9.8	-4.5	10.2	-2.7	5.8	-16.4	15.9	0.9
103	가봉	62.5	81.0	81.2	80.9	75.2	81.3	80.0	79.2	84.9	-18.5	-0.2	0.3	5.7	-6.1	1.3	0.8	-5.7
104	기니	61.4	67.7	63.4	63.4	65.3	83.0	85.4	78.3	72.3	-6.3	4.3	0.0	-1.8	-17.7	-2.4	7.2	5.9
105	인도	61.3	40.1	35.0	40.3	67.7	61.6	55.5	47.3	48.8	21.2	5.0	-5.3	-27.3	6.1	6.1	8.2	-1.5
106	리비아	60.5	61.2	61.2	61.5	61.2	61.2	60.8	70.5	84.4	-0.7	0.0	-0.2	0.2	0.0	0.4	-9.7	-13.9
107	레바논	59.1	42.7	42.7	43.4	42.9	40.6	40.9	62.7	68.9	16.4	0.0	-0.7	0.6	2.3	-0.3	-21.8	-6.1
108	시리아	58.9	59.4	56.7	49.2	62.4	48.0	58.0	65.0	80.1	-0.5	2.7	7.5	-13.3	14.4	-10.0	-6.9	-15.1
109	과테말라	58.2	58.8	52.9	58.3	51.2	50.8	45.5	55.1	58.6	-0.6	5.9	-5.3	7.1	0.3	5.3	-9.6	-3.5
110	시에라리온	57.9	57.2	57.4	56.6	56.8	56.7	57.4	59.1	70.5	0.7	-0.2	0.8	-0.2	0.1	-0.7	-1.7	-11.5
111	페루	57.9	68.9	68.8	68.6	60.7	66.3	66.5	62.2	73.4	-11.0	0.1	0.2	7.9	-5.6	-0.2	4.3	-11.2
112	중앙아프리카공	57.7	62.3	62.3	52.6	64.1	42.5	43.3	62.5	58.8	-4.6	0.0	9.7	-11.5	21.6	-0.8	-19.2	3.7
113	타지크스탄	57.6	56.8	56.9	51.5	51.4	56.8	57.4	64.2	63.5	0.8	-0.1	5.4	0.1	-5.4	-0.6	-6.9	0.7
114	짐바브웨	55.3	49.0	49.3	55.2	55.4	49.5	44.7	56.3	54.5	6.3	-0.3	-5.9	-0.2	5.9	4.8	-11.6	1.8
115	캄보디아	55.2	55.0	55.2	54.4	55.4	53.6	56.2	61.5	63.3	0.2	-0.2	0.8	-1.0	1.8	-2.6	-5.3	-1.7
116	콜롬비아	54.8	35.2	25.1	25.2	25.3	51.0	34.2	29.0	37.3	19.6	10.2	-0.1	-0.1	-25.7	16.8	5.2	-8.3
117	앙골라	52.9	52.9	52.9	47.3	51.9	52.7	53.0	40.8	43.4	0.0	0.0	5.6	-4.5	-0.8	-0.3	12.1	-2.5
118	니카라과	51.8	63.9	64.9	64.9	64.9	64.6	64.4	64.3	74.4	-12.1	-1.0	0.0	0.0	0.3	0.2	0.1	-10.1
119	네팔	51.5	42.2	52.1	35.5	39.7	29.8	48.1	38.2	30.5	9.3	-10.0	16.7	-4.2	9.9	-18.3	9.9	7.7
120	에티오피아	51.3	62.9	66.8	66.8	66.5	77.8	75.0	79.1	68.4	-11.6	-3.8	0.0	0.2	-11.2	2.8	-4.1	10.7
121	베트남	51.2	52.5	52.4	52.4	49.3	50.6	51.1	54.1	49.8	-1.3	0.1	0.0	3.0	-1.3	-0.5	-3.0	4.3
122	중국	51.1	46.2	52.0	46.3	57.3	65.7	65.6	65.7	66.2	4.9	-5.8	5.8	-11.0	-8.4	0.1	-0.1	-0.5
123	인도네시아	51.1	51.1	61.9	62.0	55.5	41.5	41.9	45.4	42.4	0.0	-10.8	-0.1	6.6	14.0	-0.4	-3.5	3.0
124	우간다	50.8	34.6	51.5	32.2	43.1	37.7	37.2	46.9	54.7	16.2	-16.9	19.3	-10.9	5.4	0.5	-9.7	-7.9
125	러시아	48.7	64.8	59.9	43.5	43.4	43.8	50.2	44.6	43.9	-16.1	4.9	16.4	0.1	-0.4	-6.4	5.6	0.7
126	부룬디	48.4	37.8	49.6	49.4	44.7	40.6	39.7	42.0	61.2	10.6	-11.8	0.1	4.7	4.1	0.9	-2.3	-19.2
127	르완다	48.4	47.0	47.0	46.7	53.4	52.0	50.1	52.7	59.3	1.4	0.0	0.3	-6.7	1.4	1.9	-2.6	-6.6
128	니제르	45.1	62.5	79.1	79.7	79.8	82.6	83.6	80.1	83.9	-17.4	-16.7	-0.6	-0.1	-2.8	-1.0	3.5	-3.8
129	수단	42.5	10.1	15.6	15.9	16.4	16.1	43.8	51.8	47.0	32.4	-5.6	-0.2	-0.5	0.3	-27.7	-8.0	4.8
130	필리핀	37.8	37.7	43.5	49.9	38.7	28.8	28.1	34.3	34.7	0.1	-5.8	-6.5	11.2	10.0	0.7	-6.2	-0.3
131	미얀마	36.1	41.8	25.3	31.4	20.1	45.3	33.5	51.6	52.7	-5.7	16.6	-6.1	11.2	-25.1	11.8	-18.0	-1.1
132	파키스탄	35.7	35.8	35.9	41.2	30.8	40.8	35.2	35.4	35.0	-0.1	-0.2	-5.2	10.3	-9.9	5.6	-0.1	0.3
133	나이지리아	35.4	34.9	35.2	35.2	23.8	29.0	40.7	40.0	56.5	0.5	-0.4	0.0	11.4	-5.2	-11.7	0.7	-16.5
134	차드	35.2	40.9	58.0	56.6	57.2	51.6	63.8	63.5	66.8	-5.7	-17.2	1.4	-0.6	5.6	-12.2	0.3	-3.4
135	이란	34.8	52.5	52.8	47.4	53.2	47.6	39.4	63.5	64.2	-17.7	-0.2	5.3	-5.8	5.6	8.2	-24.1	-0.8
136	콩고민주공화국	34.8	23.4	19.5	25.2	41.1	18.7	46.2	41.7	42.8	11.4	3.9	-5.7	-15.9	22.3	-27.5	4.5	-1.1
137	예멘	31.9	34.0	45.1	56.3	56.4	59.1	52.7	64.0	80.3	-2.1	-11.1	-11.2	-0.1	-2.7	6.4	-11.3	-16.4
138	이라크	22.4	21.8	28.1	35.5	38.9	22.7	22.7	59.5	62.1	0.6	-6.3	-7.4	-3.4	16.2	0.0	-36.8	-2.6
139	스리랑카	19.6	20.7	20.7	37.3	39.2	43.2	45.0	55.5	40.9	-1.1	0.0	-16.6	-2.0	-4.0	-1.8	-10.5	14.6
140	알제리	14.9	32.0	31.8	48.6	48.3	37.0	31.4	26.4	32.8	-17.1	0.2	-16.8	0.3	11.2	5.6	5.0	-6.4

<표 3> 군사·외교 평화지수(140개국): 2002~2010

순위	국명	2010 지수	2009 지수	2008 지수	2007 지수	2006 지수	2005 지수	2004 지수	2003 지수	2002 지수
1	일본	91.57	90.18	91.43	83.04	78.1	80.1	84.3	86.4	77.2
2	독일	91.09	91.15	86.82	90.68	89.3	86.5	82.0	86.0	85.1
3	스웨덴	89.21	88.79	87.92	87.92	87.5	87.7	87.4	83.0	85.4
4	과테말라	89.14	87.01	89.08	88.46	89.0	84.5	82.0	83.8	83.9
5	스위스	89.02	88.93	90.15	90.10	88.1	88.1	79.3	86.5	87.8
6	이탈리아	88.47	87.07	88.99	84.53	86.0	81.8	73.5	82.5	81.5
7	네덜란드	87.50	87.71	87.06	84.72	84.7	84.9	81.3	81.1	80.6
8	코스타리카	87.36	85.88	86.00	85.89	85.4	75.3	85.9	82.9	84.8
9	오스트리아	87.31	86.46	86.39	82.11	90.5	87.9	78.8	84.4	82.6
10	덴마크	86.83	87.75	79.01	76.94	78.7	87.0	78.8	83.3	82.7
11	아이슬란드	86.73	82.87	85.22	87.04	87.0	82.0	87.0	77.7	74.4
12	폴란드	86.43	86.13	79.57	79.57	81.2	85.3	68.6	84.0	75.7
13	호주	85.72	85.74	86.52	86.23	85.9	85.6	73.1	87.0	78.5
14	캐나다	85.32	83.32	81.39	78.98	84.7	78.4	83.6	84.6	81.0
15	몰타	84.70	79.11	78.75	78.64	77.2	79.2	80.5	80.5	79.5
16	니카라과	84.58	84.61	79.88	75.71	81.6	81.4	82.0	72.2	82.4
17	멕시코	84.57	78.40	76.36	76.67	81.2	86.8	85.8	81.4	85.6
18	포르투갈	84.54	84.54	84.40	84.23	82.4	82.0	80.4	82.1	81.5
19	파라과이	84.49	84.51	84.61	84.61	79.3	83.6	85.2	84.6	84.0
20	헝가리	84.13	84.51	83.85	83.62	84.4	82.3	82.5	82.4	82.0
21	뉴질랜드	83.90	84.45	79.85	82.16	81.7	81.8	79.9	81.7	81.2
22	스페인	83.62	80.21	83.24	85.21	84.0	75.4	70.7	74.2	81.4
23	남아공	83.47	83.22	83.13	83.19	80.4	80.7	80.6	80.6	77.6
24	자메이카	83.36	82.94	83.42	83.42	83.4	81.9	83.6	87.2	83.3
25	모리셔스	82.89	82.92	82.99	82.99	80.0	84.7	83.2	79.0	81.6
26	루마니아	82.77	82.44	82.31	81.45	82.1	77.8	75.4	78.6	76.2
27	벨기에	82.41	82.41	81.99	79.98	81.8	81.8	75.7	83.4	81.8
28	엘살바도르	82.09	77.43	82.24	82.19	82.2	78.0	81.2	81.3	80.0
29	아일랜드	82.03	82.13	82.14	82.03	83.7	82.0	82.0	82.0	78.8
30	피지	81.89	83.71	88.66	88.66	88.3	80.8	80.2	80.3	78.0
31	파나마	81.76	85.87	85.89	85.78	86.0	83.2	82.8	83.3	84.3
32	인도네시아	81.48	81.48	76.90	76.90	76.9	76.9	74.0	79.6	80.1
33	몽골	80.96	80.93	81.26	80.80	78.6	78.1	75.8	78.5	77.3
34	나이지리아	80.86	80.80	74.29	78.46	79.5	79.5	76.0	80.1	73.4
35	노르웨이	80.73	81.21	80.51	79.68	79.6	79.8	73.5	83.2	83.9
36	우루과이	80.50	79.97	79.85	80.03	75.1	80.6	79.6	79.8	80.0
37	온두라스	80.40	76.30	80.49	80.37	80.0	71.0	66.2	70.4	77.7
38	볼리비아	79.93	80.17	81.71	78.18	72.0	82.5	82.6	80.1	82.5
39	리투아니아	79.69	79.69	79.03	78.37	78.0	74.0	78.0	78.8	75.1
40	파푸아뉴기니	79.65	79.43	79.67	79.56	74.9	76.8	76.2	80.4	77.6
41	브라질	79.46	83.80	83.70	83.82	78.6	78.6	78.0	76.1	82.8
42	우즈베키스탄	79.20	64.63	68.50	75.96	72.9	76.1	78.3	78.6	57.6

43	룩셈부르크	78.82	77.28	77.25	77.25	76.9	85.7	85.6	85.8	87.7
44	스리랑카	78.70	80.33	80.99	82.11	79.5	80.3	82.8	78.8	74.3
45	핀란드	78.51	79.00	73.52	77.81	79.2	75.2	71.6	75.7	76.0
46	아르헨티나	78.24	80.04	79.87	73.51	73.0	75.0	79.3	79.0	79.2
47	크로아티아	78.17	78.03	77.77	77.71	77.4	77.4	77.9	70.9	67.4
48	라오스	78.15	78.11	78.06	76.23	76.2	75.8	74.9	77.1	72.4
49	가나	78.01	77.99	77.99	78.29	78.8	80.2	79.7	78.7	79.5
50	체코	78.00	79.61	79.27	80.72	78.2	76.8	73.3	77.1	84.1
51	필리핀	77.97	80.22	80.13	79.90	84.1	84.1	81.2	79.3	75.4
52	알바니아	77.81	77.93	79.10	76.76	77.2	74.9	68.2	76.4	69.6
53	말리	77.80	77.78	73.45	77.96	78.1	78.1	57.0	66.7	78.8
54	감비아	77.76	79.53	79.79	79.62	78.9	79.4	80.3	77.3	77.7
55	시에라리온	77.36	76.10	75.65	75.17	75.0	65.8	66.6	68.6	77.4
56	불가리아	77.17	77.17	79.76	79.87	82.0	70.7	62.9	72.5	77.2
57	칠레	77.13	79.32	78.10	78.04	80.7	77.6	75.1	72.9	75.5
58	튀니지	76.87	76.81	76.68	76.56	76.1	76.1	76.3	79.9	74.3
59	쿠바	76.71	73.01	66.76	66.76	66.9	69.7	68.4	71.7	61.0
60	베네주엘라	76.60	80.43	81.26	81.15	83.0	76.8	83.0	80.5	75.3
61	터키	76.58	68.00	62.95	67.24	72.1	72.1	51.9	73.3	72.4
62	세네갈	76.57	74.46	76.59	77.00	76.9	76.9	74.1	79.8	74.4
63	트리니다드토바고	76.48	76.86	75.97	77.43	77.6	77.6	78.6	78.8	74.3
64	타지크스탄	76.38	75.72	76.20	76.08	69.9	76.1	76.6	78.0	61.2
65	케냐	76.34	75.97	76.67	75.51	75.7	75.2	73.6	73.7	73.9
66	니제르	76.33	76.35	76.27	76.50	78.0	77.8	77.0	76.9	72.8
67	대만	76.10	63.92	75.44	77.18	82.1	69.3	64.1	66.8	68.3
68	말레이시아	76.04	77.94	75.44	73.35	77.6	69.7	68.3	70.1	68.4
69	슬로바키아	76.00	78.87	79.10	78.34	74.3	77.9	78.0	80.0	74.5
70	에콰도르	75.96	78.26	80.41	80.79	81.0	79.6	80.3	80.3	80.4
71	카자흐스탄	75.90	75.85	74.96	74.73	70.6	78.4	74.2	75.0	74.4
72	우크라이나	75.81	75.52	74.06	71.86	70.8	76.7	74.4	84.0	71.4
73	러시아	75.55	82.44	63.68	62.14	59.0	64.6	64.0	72.2	56.0
74	도미니카공화국	74.93	78.56	79.99	79.94	76.3	77.7	71.4	76.7	86.6
75	토고	74.68	75.15	74.90	74.79	77.2	75.9	75.9	75.0	77.0
76	짐바브웨	74.62	74.62	64.89	66.88	69.3	69.6	70.8	75.3	69.5
77	콩고민주공화국	74.59	74.34	74.82	73.66	72.2	51.8	56.4	65.0	67.5
78	콜롬비아	73.99	74.06	75.00	76.97	77.2	77.2	77.9	81.7	81.2
79	르완다	73.64	71.22	70.55	71.28	61.5	59.4	58.3	62.9	70.3
80	카메룬	73.54	73.23	71.11	72.19	73.0	73.0	70.2	74.4	71.7
81	바레인	73.41	70.97	67.72	67.46	73.3	68.4	67.9	72.8	65.6
82	미국	73.33	61.91	61.76	61.21	63.4	61.7	63.3	62.7	61.5
83	알제리	73.03	72.70	72.91	68.11	70.7	64.5	68.3	68.0	67.5
84	그리스	72.37	72.57	72.74	71.93	69.9	69.8	69.4	69.7	66.9
85	차드	72.02	66.61	73.04	72.24	74.0	68.0	70.3	70.3	69.8
86	페루	72.00	75.35	75.77	75.89	73.3	81.3	80.9	80.8	82.0
87	기니	71.68	73.42	72.60	71.23	72.6	68.3	72.7	68.8	74.7

88	바하마	71.34	71.09	71.54	71.77	82.3	72.7	71.6	75.0	84.7
89	네팔	71.29	74.73	74.81	74.81	75.1	77.3	77.7	76.7	85.7
90	키르기스스탄	71.20	76.61	74.35	70.42	72.0	75.1	71.7	73.9	65.2
91	수단	71.09	63.92	67.90	73.70	72.6	64.5	65.6	66.8	55.3
92	잠비아	70.87	89.72	85.91	87.75	87.7	73.7	73.3	74.6	73.6
93	예멘	70.09	72.39	72.95	69.97	61.2	64.5	62.7	61.7	74.8
94	모잠비크	70.04	75.70	75.45	74.08	74.3	74.1	74.2	74.3	72.7
95	라트비아	69.93	79.43	75.67	79.72	75.0	79.2	78.8	79.8	76.8
96	모리타니	69.92	69.41	69.56	69.22	68.5	64.6	68.8	68.5	72.2
97	보츠와나	69.71	71.17	66.47	71.81	68.6	71.7	71.2	72.7	70.6
98	슬로베니아	69.70	76.75	78.76	78.99	79.2	79.3	78.8	78.8	74.8
99	카타르	69.57	66.91	64.88	60.39	52.6	51.7	54.7	57.7	48.2
100	싱가포르	69.51	69.34	66.72	66.72	66.5	66.3	68.1	66.1	66.6
101	영국	69.49	70.31	68.45	70.28	77.9	61.2	62.7	68.9	79.1
102	탄자니아	69.24	68.92	64.01	64.01	68.6	68.5	66.6	68.3	69.8
103	중국	69.15	73.25	77.55	79.41	75.0	68.8	78.5	68.1	74.9
104	나미비아	68.96	69.05	69.59	69.25	70.4	70.4	69.5	68.0	71.3
105	몰도바	68.57	70.33	61.89	65.94	68.0	71.7	65.3	76.0	67.9
106	중앙아프리카공	68.33	73.78	73.71	65.32	72.4	72.4	72.6	74.5	75.7
107	에스토니아	68.30	77.94	74.40	77.95	73.0	77.2	78.3	78.9	75.7
108	말라위	68.00	67.70	68.97	68.74	68.5	68.8	68.8	69.2	76.5
109	벨로루시	67.82	70.65	70.19	69.62	71.7	74.0	74.9	75.2	71.0
110	에티오피아	67.72	65.04	63.33	66.68	75.1	73.9	69.2	68.7	69.0
111	방글라데시	67.58	76.83	76.89	70.76	71.7	73.8	69.3	76.9	62.2
112	태국	66.72	66.82	79.62	81.59	79.7	78.4	69.8	77.9	66.4
113	가봉	65.80	65.50	66.59	66.59	66.8	66.8	65.1	64.8	70.5
114	이집트	65.65	58.74	59.98	53.16	62.2	57.8	51.3	54.5	50.3
115	그루지야	65.30	46.56	68.84	68.90	72.6	77.6	78.8	72.0	51.5
116	쿠웨이트	65.02	66.27	62.50	61.13	58.2	57.8	51.2	56.8	58.8
117	우간다	64.89	64.55	61.98	61.75	64.1	63.4	63.1	66.5	63.5
118	앙골라	64.60	62.39	62.01	62.64	65.2	59.7	56.3	55.9	55.1
119	베트남	64.24	57.66	54.32	62.86	60.2	60.5	55.2	63.4	65.6
120	부룬디	63.50	63.03	65.64	63.51	63.0	54.4	64.7	59.5	66.8
121	리비아	63.33	65.50	64.38	64.38	58.0	62.0	60.9	58.9	53.0
122	모로코	62.62	62.80	61.77	59.57	61.5	61.3	62.0	57.1	57.5
123	프랑스	62.27	73.58	74.36	63.83	69.5	66.5	76.4	68.9	82.0
124	인도	62.20	62.31	61.81	51.17	60.0	66.2	57.7	60.7	64.4
125	사우디아라비아	62.11	64.88	66.86	63.74	62.8	61.5	61.6	62.4	60.9
126	아르메니아	61.38	56.88	68.58	59.76	62.8	64.4	67.8	63.9	59.9
127	한국	61.33	69.33	67.41	65.55	65.3	56.8	57.0	47.4	68.2
128	오만	59.44	69.22	75.34	75.34	75.3	67.6	74.8	65.1	60.9
129	이란	58.93	58.81	63.40	58.54	73.7	68.3	52.2	60.2	64.2
130	미얀마	58.61	57.75	62.99	60.03	50.4	54.8	61.2	77.2	62.9
131	요르단	56.28	56.30	57.96	52.99	56.7	52.5	50.3	51.2	37.9
132	캄보디아	56.24	46.31	60.36	61.68	62.6	53.2	51.0	51.3	63.4

133	파키스탄	55.92	57.73	57.00	69.61	70.2	64.3	50.3	53.8	35.8
134	아랍에미레이트	53.24	52.81	58.36	56.18	54.8	56.6	48.1	48.8	54.9
135	레바논	52.22	62.44	51.93	41.40	50.1	50.1	49.6	45.0	43.7
136	시리아	48.85	43.87	37.75	42.40	48.3	29.0	17.6	25.9	30.4
137	북한	47.19	46.98	40.60	28.10	42.7	43.0	32.3	32.3	54.9
138	아제르바이잔	46.57	63.39	63.87	63.67	61.0	62.3	66.9	59.2	62.4
139	이스라엘	44.15	52.76	44.08	53.55	55.0	33.5	33.2	31.4	29.1
140	이라크	37.80	24.18	37.38	40.67	38.1	29.8	21.8	29.0	20.2

<표 4> 사회·경제평화지수 2010: 76개국

		사회·경제 평화지수	안전 및 안정	불평등과 차별·배제	삶의 질과 사회적 보장
전세계 평균		73.7	73.0	64.1	83.9
1	노르웨이	88.0	85.8	82.2	96.1
2	네덜란드	84.3	80.9	79.2	92.9
3	덴마크	83.6	69.4	81.5	100.0
4	아르헨티나	82.0	84.6	72.1	89.4
5	스웨덴	81.8	65.0	83.1	97.4
6	아일랜드	81.4	85.4	68.1	90.6
7	그리스	81.3	87.0	70.5	86.4
8	스위스	81.3	76.2	74.7	92.9
9	체코	81.2	70.2	85.0	88.4
10	싱가포르	81.2	80.4	77.6	85.4
11	스페인	81.1	81.8	72.5	89.0
12	코스타리카	80.9	82.4	73.3	87.1
13	독일	80.9	71.7	81.7	89.3
14	프랑스	80.5	73.6	74.7	93.2
15	캐나다	80.4	75.9	74.4	90.9
16	크로아티아	80.1	71.2	82.6	86.7
17	핀란드	80.1	65.1	80.4	94.8
18	벨기에	79.8	71.4	73.4	94.5
19	알바니아	79.6	75.0	73.9	90.0
20	멕시코	79.0	89.6	61.2	86.2
21	오스트리아	79.0	68.7	75.6	92.5
22	호주	78.7	71.5	72.7	91.9
23	영국	78.3	71.9	69.7	93.2
24	우루과이	78.2	77.7	72.7	84.1
25	필리핀	77.9	97.1	63.2	73.4
26	말레이시아	77.6	74.9	73.2	84.8
27	태국	77.5	83.6	68.7	80.0
28	리투아니아	77.4	72.3	72.7	87.3
29	이란	77.2	85.6	63.3	82.6
30	루마니아	77.1	80.2	69.9	81.3
31	폴란드	76.7	69.8	69.5	90.8

32	우크라이나	76.5	75.3	74.2	80.0
33	베네주엘라	75.9	74.4	71.3	82.1
34	한국	75.6	74.8	63.2	88.6
35	자메이카	75.5	77.2	65.3	84.0
36	튀니지	75.5	84.5	53.1	88.9
37	일본	75.4	65.7	74.1	86.4
38	이탈리아	75.3	81.9	53.7	90.3
39	미국	75.2	65.4	66.6	93.5
40	슬로베니아	75.1	62.2	69.6	93.4
41	헝가리	74.8	53.0	81.6	89.7
42	브라질	74.7	84.9	54.4	84.9
43	불가리아	74.5	78.7	66.2	78.6
44	뉴질랜드	74.3	67.0	60.6	95.1
45	중국	74.2	84.1	66.7	71.8
46	파나마	74.1	76.1	63.8	82.5
47	터키	74.1	78.0	62.9	81.3
48	포르투갈	74.0	73.1	57.9	91.0
49	벨로루시	73.8	59.4	75.6	86.2
50	요르단	73.7	72.6	66.3	82.3
51	칠레	73.7	76.5	65.9	78.6
52	카자흐스탄	72.7	66.2	74.6	77.3
53	트리니다드 토바고	72.5	60.6	76.1	80.9
54	알제리	72.4	77.0	57.6	82.7
55	룩셈부르크	71.1	65.0	54.5	93.7
56	이스라엘	70.6	72.3	44.3	95.1
57	에콰도르	70.4	75.5	62.4	73.3
58	엘살바도르	70.3	75.0	59.2	76.8
59	페루	69.1	74.3	56.5	76.4
60	볼리비아	69.0	69.1	53.3	84.6
61	콜롬비아	68.7	67.5	57.9	80.6
62	스리랑카	66.3	52.9	58.4	87.6
63	러시아	66.0	50.2	65.8	81.9
64	인도네시아	65.9	67.0	55.1	75.8
65	니카라과	65.9	73.0	52.1	72.6
66	시리아	65.5	53.6	62.1	80.8
67	모로코	65.4	80.3	37.8	78.0
68	이집트	64.4	69.5	48.9	74.8
69	인도	60.9	72.6	42.0	68.2
70	모리셔스	60.5	81.4	19.4	80.6
71	남아공	58.7	53.1	44.7	78.2
72	방글라데시	58.4	73.5	39.7	62.0
73	케냐	58.0	56.5	42.0	75.5
74	나이지리아	56.1	71.1	35.5	61.8
75	짐바브웨	54.0	72.4	31.7	58.0
76	파키스탄	47.9	55.9	37.3	50.6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기미야다다시(도쿄대학교)

머릿말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은 원래 일본의 평화연구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했던 문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는 일본사회에서는 인접국 문제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문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관심 사이에 괴리라 왜 존재했는지 본고는 먼저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와의 사이에 존재했던 괴리에 관해 그 이유를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금이야 말로 일본의 한반도 연구에는 평화연구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연구적 시각에 입각한 한반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일본 평화연구에 있어서의 "한반도"

필자는 일본의 평화연구를 주도해 온 일본평화학회(The Peace Studies Association of Japan) 1) 회원으로서 25년이상 활동하면서도 사실은 평화연구자라는 명확한 자각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필자가 일본의 평화연구에 관해 논의한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은사이신 사카모토요시카즈(Sakamoto, Yoshikazu) 선생님께서 국제평화학회(IPRA: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사무국장을 하셨던 만큼 일본의 평화연구나 평화주의나 평화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신 분이므로 필자도 평화연구를 항상 의식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평화연구 전체를 대표해 논의한다는 입장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일본의 평화연구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일본평화학회는 주로는 일본의 비둘기파(평화주의적) 정치학자들이 중심으로 다른 학문 분야에 속하는 인문사회과학자들, 때로는 자연과학자들도 포함하여 설립되었다. 그 후에는 주로 평화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운동가들이나 연구자들이 가입함으로써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도 제도화된 다른 학회와는 달리 매우 유연한 제도를 가지면서도 특히 운동가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다. 학자들과 운동가들과의 공존이 얼마나 잘 되어 왔는지는 평가하기 어려우나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로서 공존해 왔으며 점차 평화운동 운동가들의 영향력이 증대해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의 평화연구는 한편으로 일본의 독자적 배경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침략전쟁경험에 대한 반성에 입각했으며 그 결과 얻어내는 평화헌법, 전쟁 포기나 군사력 포기를 명기한 헌법 9조를 중심으로 한 평화헌법을 소중한 것으로 봤다. 또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의 피폭이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입장에 입각해 핵무

1) 일본의 평화연구를 일본평화학회가 대표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학회로서는 일본평화학회가 유일한 학회로서 존재한다. 일본평화학회에 관해서는 다음의 학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http://www.psj.org/> 이 것에 따르면 일본평화학회는 1973년 설립되었다.

기에 대한 거부자세를 명확히 했다²⁾. 더구나 이론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략연구의 시각과는 달리 이것에 대한 반발로서 주로는 북구의 평화연구의 이론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이라는 과학의 기본 이념과는 달리 평화라는 가치를 명확히 지향했으며³⁾ 평화를 안정이라는 상태로서만 보는 것은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 없는 상태이며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게 직접 공헌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책과학이라기 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비판과학이라는 지향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⁴⁾.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의 평화연구의 특징은 왜 한반도에 대한 과학적 관심을 그다지 나타내지 못했는가? 돌이켜 보면 한반도라는 일본의 평화에 직결된 지역에 대해 일본의 평화연구가 무관심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았음에 반해 적어도 1980년대까지 만해도 학문적 관심이 별로 높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물론 일본의 사회과학 전체로 볼 때도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평화연구에 관해서도 똑같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역시 평화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평화연구가 사회적 관심에 비해 학문적 관심에 관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덜 높았다는 것은 문제이었다고 생각한다⁵⁾. 따라서 그 이유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냉전체제에 대한 평화연구의 시각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도 냉전체제 하에서 서방 진영에 포섭되었으나 냉전체제로 인해 분단된 한반도와는 달리 냉전체제를 상대화할 시각은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한편으로는 일본에 있어서의 "보수" 대 "혁신"이라는 정치적 균열은 한반도에 대해서도 "친 한국" 또는 "친 북한"이라는 양자택일을 일본의 정치세력들에게 강요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평화연구는 냉전체제 하 어느 쪽 진영을 지지하느냐 하는 선택 그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는 소위 "중립"지향이 애초부터 강했다. 따라서 "중립"을 지향하는 평화연구는 한반도라는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대상을 선택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한반도를 연구대상으로서 제외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 2) 일본평화학회의 설립취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언이 있다. "전쟁피해자로서의 체험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 일본이 다시는 전쟁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화연구"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위의 웹 사이트를 참조.
- 3) 설립 취의서에는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나 연구의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결코 도덕적 중립성은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으며 또한 학회 규칙에는 "본 학회의 연구성과가 전쟁 목적을 위해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못한다" 하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방위대학교나 방위연구소와 같은 일본의 방위성이나 자위대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관한 것이다. 위의 웹 사이트를 참조.
- 4) 일본 평화학회 설립 취의서에는 "우리들은 연구성과가 현존제도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바란다. 그러나 한편 우리들은 결코 단순한 정책과학에 머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현존제도에 의한 지식 악용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비판을 계속하는 소위 비판과학으로서도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한다"라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위의 웹 사이트를 참조.
- 5) 평화연구의 시각에 따른 한반도 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1970년대 당시로서는 탁월한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Sakamoto, Yoshikazu, *Korea as a World Order Issue*, New York, World Order Models Project Occasional Paper No. 3, 1978.

그렇다면 일본의 평화연구는 한반도의 남북분단체제에 대해 완전히 "중립"을 지켰다고 볼 수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첫째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친근감을 지적할 수 있다. 평화연구가 사회주의적 이념을 완전히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 운동, 체제에 대해 더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평화연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파 보다 좌파의 영향력이 강했으며 따라서 한국, 특히 동시대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했다. 그런데 그럴 경우도 한국의 현 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북한 현 체제에 대해서는 지지하기보다 "침묵"했다고 볼 수 있다. "침묵"은 지지하는 것과는 달리 "방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한국에 대한 비판적 자세와는 대조적이었을 것이다. 둘째로, 평화연구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보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비판과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만을 지지하려는 보수 정부와는 달리 한국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취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정체체제의 폐쇄도의 차이로 기인하는 정보량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에 관해서는 TK생(나중에 치명관 선생님이라고 밝혀졌으나)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⁶⁾이 대표적인 것인 만큼 유신체제 하의 인권탄압 실상이 생생하게 알려졌는데 반해 북한의 실상은 그다지 알려 주지 못했다. 따라서 반공 독재체제인 한국 보다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북한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중립"을 지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북한에 대해 관대했다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평화연구를 담당하는 소위 "진보적" 지식인들이 남북한에 대해 "중립"을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한에 대해 더 친근감을 띠는 "편견"을 가짐에 따라 현실을 보는 눈도 "흐려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지식인들이야 말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 책임이나 전쟁 책임에 대해 더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 자체가 어떠한 의미에서 또 다른 "우월감"의 반영이었다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었으나⁷⁾ 하여간 이와 같은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과 한국 사이가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에서 비극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한반도 연구에 있어서의 "평화"

한국전쟁, 한일수교협상, 재일한국인 귀환 등 일본사회에 있어서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낮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과학적 이해 특히 한반도를 내재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한반도 연구가 냉전체제로 인해 크게 제약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뿐 만 아니라 냉전체제하에서 냉전체제를 어떻게 연구대상으로서 삼느냐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냉전의 기원이나 책임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서도 정통주의(orthodoxy) 대 수정주의(revisionism)의 대립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매우 분열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일본의 이와나미 서점에서 나온 총합잡지 "世界 (세카이)"에서 1972년부터 1988년까지 연재되었던 TK 생라는 필명에 의한 「韓国からの通信」을 가리킨다. 이것은 나중에 당시에 일본에 체재했던 치명관 도쿄여자 대학교 교수(전 잡지 "사상계" 편집 주간)가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7) 이와 같은 시각에 입각해 잡지 세카이의 한반도 인식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연구로서 한상일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세카이와 한반도" 기피량, 2008년, 을 참조.

한편으로는 일본의 보수적 국제정치학에 따르면 북한이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만큼 일본의 실질적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일본이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서 설정해 왔다. 그래서 단단한 군사력을 갖추어 동시에 미일동맹관계를 견고화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성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⁸⁾.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냉전에 관해서 북한이 더 정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만큼 오히려 공격적인 것은 한국 또는 한국을 뒷받침하는 미국이라는 인식에 입각해 한국만 지원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다⁹⁾. 이와 같이 좌우 대립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을 제약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화"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야 비로소 "평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거나 현상유지인 분단체제 지속은 "평화"가 아니라는 "평화"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화"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평화연구의 평화와는 달랐다. 따라서 평화연구가 제시하려고 했던 "평화"와 한반도의 실제의 평화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1965년 한일수교까지는 이와 같이 냉전체제로 인해 제약받는 한반도 인식은 일본의 사회과학을 크게 제약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분단체제 하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느냐가 연구자의 정치적 이념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를 보는 시각에 관해서는 "중립"은 허용되지 못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이와 같은 양자택일적 한반도 인식을 상대화시키려는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다. 이것은 남북한을 이념에 따라 편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에 따라 등거리로 보려는 시각이다¹⁰⁾. 따라서 지금까지 남북한 체제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과 연대하려는 것이었다¹¹⁾. 그런데 이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그다지 비판적이지 못했다는 결함이 있었다. 왜 이들은 북한에서의 인권에 대해 "침묵"을 지켰을까? 이것도 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냉전으로 인한 제약을 면치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남북한 체제의 실적이 큰 괴리가 생김에 따라 남북한을 등거리로 보려는 의미도 달라졌다. 남북한 어느 쪽 체제가 더 나은 체제인가 라는 문제 그 자체가 문제로서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남한의 시장 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한 체제라는 인식이 공유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체제 경쟁에 관해서는 결론났기 때문에 한반도 냉전체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이 더 우월한 체제를 가지고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을까, 따라서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뿐이라는 비교적 낙관적 시각이 한 때는 지배적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통일이 평화라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것이나 원래 한반도 연구 자체는 평화연구와는 그다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생각 밖의 일이었다. 평화연구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쩔

8) 일본의 국제정치학자들 중에서 이와 같은 보수적 이념에 입각해 활발하게 한국연구에 몰두했던 연구자로서는 대표적인 것은 가미야흐지(神谷不二)씨를 지적할 수 있다. 神谷不二 『現代國際政治の視角』東京、有斐閣、1966年, 을 참조.

9) 이와 같은 시각에 입각한 전문적 연구자들은 주로는 역사학자, 특히 조선사 전공 역사학자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연구자로서는 가지무라히데키(梶村秀樹)씨를 지적할 수 있다. 梶村秀樹씨의 저작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 梶村秀樹著作集刊行委員会編集委員會編 『梶村秀樹著作集 全6巻』東京、明石書店、1992~93年.

10) 대표적 연구자로서는 앞서 지적한 와다하루키를 지적할 수 있다. 和田春樹 『北の友へ南の友へ：朝鮮半島の現状と日本人の課題』東京、御茶の水書房、1987年, 등을 참조.

11) 青地震 和田春樹 編 『日韓連帯の思想と行動』東京、現代評論社、1977年, 을 참조.

수 없이 시장민주주의라는 가치관에 따른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관해 그다지 과제 의식을 기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구 동구권 국가들, 그리고 구소련(1990년), 나아가 중국(1992년)과의 수교,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이 주장했음에도 북한의 반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1991년 실현되었던 바와 같이 점차 한국의 외교적 우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평가되었을 것이다. 물론 북한도 새 상황에 대응하려고 미국이나 일본과의 수교를 지향했으나 잘 이루어질 것인지 불투명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커짐에 따라 이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과제가 일본의 평화연구 내지 한반도 연구가 직면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까지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는 괴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적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3. 북핵위기와 평화연구

일본에서의 평화연구자들로서는 북핵 위기, 북한의 핵 개발은 이론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었던 또는 예상했어야 했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북핵 위기는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따라서 지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평화연구로서는 항상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함과 같은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핵 비확산 체제가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깨질 것이며 따라서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의한 핵 개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1980년대에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평화연구자인 아리 마즈루이(Ali Mazrui)라는 학자가 핵 군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핵 군축에 대해 소극적인 핵 보유국들을 자극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 개도국들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극약적 처방책을 제시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상황이 일본에 가까운 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왜 그런가?

첫째로, 일본의 평화연구가 전제로 삼고 있었던 핵 인식 때문이다. 일본의 평화연구가 가장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핵 위협은 미국의 핵으로 인해 미소 핵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소 핵 군비경쟁으로 인해 핵 전쟁의 위험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한 인식의 전제로서는 핵은 초강대국들이 소유하는 특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둘째로, 북한의 의도에 관한 너무나 낙관적 평가를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평화연구의 주류는 적어도 1970년대까지 만해도 한반도 문제에 관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나이브하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그러한 나이브한 평가의 연속선상에서 설마 북한이 핵무장을 진지하게 노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깔려 있었다. 또한 북한을 둘러싼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입장에 동정하는 편이었다.

셋째로, 북한의 군사능력 또는 과학기술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려고 해도 그럴 만한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 기술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핵보유국인 구 소련이나 중국은 한편으로는 핵 우산을 북한까지 포함시키기에는 신중했으면 하면서도 북한 그 자체의 핵무장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학기술을 북한에게 공여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원자력이나 미사일에 관한 선진적 기술을 보유하려는 데에는 어려움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한반도 연구는 북핵 위기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언제나 떠오른 경험이 있다. 지금 돌아가신 어느 저명한 평화연구자가 필자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일본의 한반도 연구 특히 북한연구는 항상 현상 추인적이며 깊이가 없다" 하는 비판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 때 필자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비판한다고 하면 자기가 그러한 연구를 함으로써 보여 주면 되지 그러지 못하면서 왜 그러한 비판만 하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면서 또한 지역연구의 어려움을 모르면서 왜 그러한 비판만 내세우느냐 하는 불만이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충고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받았다.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을 때 인접국인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도 높았으며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일본의 한반도 연구가 어느 정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목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치가 민주화됨에 따라 한국연구뿐만 아니라 북한연구에 관해서도 일본의 한반도 연구가 차지할 수 있었던 비교우위가 없어짐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연구도 어느 의미에서 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한반도 연구가 어디서 어떠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일본의 평화연구의 전통이 한반도 연구에게 응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비교우위를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한국에서 냉전체제하 또는 권위주의 체제하 평화연구와 같은 학문은 어떠한 의미에서 불모상태이었으나 그 후 평화연구도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며 일본의 평화연구와는 다른 한국적 평화연구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평화라는 이름이 붙은 연구소가 많이 생기고 있을 줄 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화연구 분야에서도 일본이 차지해 온 비교우위는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평화연구에 관해서는 일본이 좀 더 긴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북핵 위기 해결이나 통일 문제에 관해서도 시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으로 평화연구의 시각을 살리면서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고찰하고자 한다.

4. 평화연구 시각에 입각해 북핵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평화연구의 시각이라고 해도 어느 특정한 문제에 대해 획기적 처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화연구의 힘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전제를 두면서도 평화연구의 힘을 살리면서 북핵 위기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점도 있다.

첫째로, 평화연구는 물론 당장 눈앞의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하나 그러한 대중 요법뿐만 아니라 근본적 치료를 시도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 위기에 관해서도 북한의 핵 무장을 봉쇄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북한의 국가체제가 문제이며 그러한 체제만 없애자는 것이 결코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북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북한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의 "북한"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역시 문제는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함 특히 비핵보유국이 직면해야 할 안보불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려는 북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하여금 핵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다. 모든 비핵보유국이 핵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

이다. 한국도 일본도 핵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것을 억제해 왔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핵의 우산으로 인해 보호받았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 보다 스스로 핵을 가지려고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의 핵 무장은 비핵화를 선택했던 한일양국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만든다. 아무리 북한이 핵 문제는 남북관계나 북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 문제라고 강변해도 역시 북한의 핵 무장을 대단한 위협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점차 핵 무장이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까지 그러한 주장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장이 장기간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한 여론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북미관계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도 일본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야 하며 북핵 문제에 관해 당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핵 비확산 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에 대해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 선제 불사용 등 핵 위협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보장을 제공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나 북일 관계라는 양자 협상 틀 속에서도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핵 문제는 북미관계의 문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다. 한국도 일본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라는 것은 한미일이라는 틀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 하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나 핵 비확산 체제 속에 비핵보유국이라는 공통적 입장에 따라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한일양국이 나름대로 또한 서로 협력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북한에 대해 그것을 벌 받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주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북핵을 포기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양보나 희생은 있게 마련이다.

둘째로, 평화연구가 내세우는 평화가치는 평화라는 상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평화나 통일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그것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들이 배운 교훈이었으며 한반도에 관해서도 한국전쟁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목적으로서의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밖에 없다는 극한적 상황 하에서는 그러한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다만 그러한 극한적 상황이 아닌 경우는 수단으로서의 평화가치라는 것도 중요시해야 한다. 목적이나 결과를 위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평화연구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에서는 무엇보다 군사적 수단에 따른 북한에 대한 침공이라는 수단은 그것에 대한 북한의 보복에 따라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 예측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에 대한 변혁(regime change)이라는 수단도 물론 북한 민중들이 스스로 일어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행동을 선택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그러한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가운데 바깥으로부터 개입하는 것은 아무리 강변해도 해서는 안 되는 선택지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북한체제 자체가 매우 공고한 가운데 인도적 개입이라는 것은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현 체제와의 협상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남아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수단으로서의 평화라는 가치를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다른 길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정책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느끼는 것이나 먼저 일본도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북한을 움직일 수 있었던 수단을 스스로 포기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까지 만해도 일본은 북한의 최대무역상대국중의 하나였다¹²⁾. 그때는 그러한 무역관계를 수단으로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납치 문제로 인해 다음으로는 핵 또는 미사일 문제 때문에 제재를 강화시킴으로써 무역량은 크게 위축하고 말았다. 물론 북한경제도 타격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으나 북한에 대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압력수단도 포기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일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었다. 남북관계에는 1990년대에 들어 교역이나 투자도 늘어났으며 특히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만큼 특히 경제적 관계는 축적되어 갔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제2차 북핵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경제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는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 주기만 했을 뿐 얻어내는 것은 별로 없었으며 나아가 북한의 핵 개발까지 허용하고 말았다는 비판에 입각해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양보를 끌어내려고 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며 대신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기 위해 대북원조를 이용하려는 "비핵개방 3000"을 제시하게 되었다.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수단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권이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뜻은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깥에서 보면 핵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며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에 끌려가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 중단 등으로 북한도 손해를 봤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이 경우는 북한의 손해가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한국도 북한도 서로 윈윈(win win)이 아니라 서로 lose lose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다.

이와 같이 한일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느라고 결국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력수단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대신 북한이 의지하게 되는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특히 북한의 핵 보유나 세습체제에 대해 더 엄격히 반대의사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내 일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면서도 북한에 대해 더 관대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끌어 올렸다. 물론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증대시킨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비롯한 정책을 억제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없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 저지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 보유는 그다지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희생을 치르더라도 달성시켜야 할 과제로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

12) KOTRA 자료에 따르면 1994년 북한의 교역량 21.1억달러 중에 1위는 중국, 6.2억 달러(29.6%)이며 일본은 2위 4.9억달러(23.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3위, 1.9억달러, 9.0%에 불과했다. 한국정부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11" 통계청, 1995년, pp. 111~112.

다. 북한으로서 핵 개발 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에도 몰두해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은 역시 북한의 핵이 미국을 사정거리 안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러한 것이 확실해지면 북한의 핵에 대해 더 심각하게 대응하려고 하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 북한의 핵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대응해 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관해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미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이 서로 협력해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이나 일본이 한때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탈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회를 찾아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해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북한에게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재촉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이와 같은 공여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한 협력과 북일 수교에 따른 경제협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그것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지금 일본의 대북여론을 볼 때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더 성의 있는 가시적 조치가 있거나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명확해지지 않는 한 협상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다만 문제는 북한의 일방적 양보가 없는 한 아무 것도 못한다면 일본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외교를 전개할 수는 없게된다. 나아가 일본 국내정치는 민주당 정부의 불안정함과 진재부흥에 몰두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획기적 선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재정적 어려움도 가중되기 때문에 당장 북일 수교나 북일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문제는 전후의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만드는 것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간의 이질성을 좁힘으로써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궁지에 몰리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유리한 고지를 지킬 수 있는 것이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은 북한의 강경한 대남 지세나 핵 보유를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나 체제 격차를 볼 때 이와 같은 염려는 기우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그래도 북한 체제의 공격성이라는 인식과 함께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한국으로서 얼마만큼 유리하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맺는 말

평화연구, 특히 일본의 평화연구와 한반도 연구가 왜 괴리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설정함으로써 평화연구에 입각한 한반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그래서 구체적 문제로서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함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목적으로서의 평화 뿐만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평화라는 가치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대북정책에 관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선택했어야 했으나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선택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이 비핵보유국이라는 공통적

입장, 그리고 북핵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될 입장에 입각해 서로 협력함으로써 어떠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했다. 물론 이와 같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견고하며 따라서 여기서 제시한 처방책이 소용 없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평화연구에 따른 접근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런데 북한의 정책 자체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핵 비확산 체제가 안고 있는 불평등함을 극복하고 평화적 수단에 따라 북한의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할 선택이라고 믿는다.

제 2회의

16:00~18:00

사회: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백영서 (연세대 교수, 국학연구원장)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

함광복 (한국DMZ연구소장)

황광석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통일을 바라보며 평화를 생각한다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실천과 이론

조명숙(여명학교 교감)

I. 북한이탈주민의 의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내에서는 인권의 피해자였으며, 중국 등 제 3국에서는 난민으로 살았고, 남한에 입국하여서는 타문화 이주자로서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다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들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진 이주민들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의 경험을 가진 그들의 과거나 다문화이주자요 소수자로서의 그들의 현재 보다는 **통일한 국을 만들어 갈 주체로서의 미래 관점에서 그들을 인식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남한의 역사나 먼저 통일한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민주화나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국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 회복에도 역할을 주어야 가장 “좋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주체적 참여가 없이는 “점령당했다.”는 소외감을 느껴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에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폐쇄된 북한사회의 특징과 그 주민의 성향을 연구하여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이전에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은 매우 크며 그들의 존재자체는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이며 기회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지원할 때 그들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고민하며 혹 그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오히려 그들이 남한 정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소외계층 차원에서의 접근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일 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통일이후에는 이를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미래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간과하고 이들을 단순히 현재의 소외계층으로 인식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과정에서 독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의미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남한에서는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먼저 온 미래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안한 각종 지원제도와 계층간, 세대간의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통일 후 일반화할 수 있는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II. 북한이탈주민현황

- 1) 2010년 11월 15일 현재 20,000명을 돌파하였고, 년 3,000명 미만이 입국하고 입국 인구의 70% 이상이 20~40대 여성이며, 전체의 60%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한다.
- 2) 기입국한 부모(대부분 어머니)나 친인척이 브로커를 통해 자녀나 동생을 입국시키므로

전체 입국자의 10% 이상이 20대 이하 미만의 청소년이다.

- 3) 중국에서 5~10년 불법적인 상태에서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장기체류하고 입국한 경우와 친인척을 통해 단기간에 입국한 경우로 크게 두 경향이 있다.

III.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이해

1. 북한 - 북한 체제의 희생양, 북한 체제의 투사체

1) 북한체제의 특수성

- ① 사회체제(정치, 경제 문화)의 차이이해, 유물론적 성향
- ② 남녀 성역할의 차이 및 봉건적 - 유교적
- ③ 사회주의(획일적, 사회주의 의존성, 책임감저하) - 자유와 선택권, 저항권, 자주권이 인정되지 못함
- ④ 이상화된 정치지도자의 가부장적 카리스마의 지배와 높고 엄격한 정치적 기준과 높고 엄격한 체제 - 공개처형들에 노출되므로 공포분위기와 위압적 분위기(전시체제 및 군사문화), 용서가 없는 사회 - 잘못의 인정을 못함

2) 최악의 생존환경(식량난)의 영향

- ① 환경으로부터의 스트레스, 사회혼란으로 인한 규범의 모호함 - 생존이 모든 행동의 원리가 됨
- ②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을 당시 태어난 95년 이후 출생자들은 태어나서부터 식량난으로 인한 고난과 혼란을 겪게 됨(기본 사회 질서나 시스템에 대한 경험 부족) - 무한 고통
- ③ 식량난으로 인한 영향(신체와 지능 성장 및 정신건강에 영향)
- ④ 유아기 및 성장기에 부모와의 이별
- ⑤ 비자발적 탈북

2. 중국 및 제 3국

- 1) 난민생활 - 수용과 감금
- 2) 인권유린 - 강제적 결혼과 출산, 자유로부터의 분리, 억압, 눈치밥
- 3) 새로운 가정 형성(중국 아버지, 어린 동생), 중국의 아버지의 어머니 구타와 억압의 지속적 목격
- 4) 자발적 인신매매

IV.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상의 문제점

1. 부모와 자녀 역할의 변화
2. 가족의 시차적 입국 및 남한적응의 문제, 남겨진 가족에 대한 염려
3. 단절과 상실(친구, 친척, 환경 등)

4. 경제 문제¹⁾ - 남한에서 소수자로 지원받으며 생활함(자존감 낮음)
5.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부적응(교육환경의 생소함)
6. 생소한 사회 환경의 영향 - 자신들만의 섬으로 살아감(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려움)
7. 성격적 특성 - 급하고, 강하고, 직설적 성격
8. 통일일꾼과 소외계층이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V.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통한 통일대안마련 방안

1. 자녀 교육을 통한 지원

제 3세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그리하듯 한 가정의 회복과 경제적인 회복의 기반인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자녀들을 통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작게는 남한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통일시대에는 2등 시민으로의 전략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의 학교에서 북한학생들을 정착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일반학교의 프로그램, 여명학교와 같은 특성화된 대안학교)을 만들어 학교를 통한 강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학교에서는 타 일반학교나 교육프로그램보다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기능, 보호의 기능, 남한사회 적응기능 까지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 유일한 기관이므로 이에 대한 지역사회와 타 기관 및 정부는 학교를 운영을 위해 입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야간 및 사이버 교육을 통한 성인들의 평생학습지원

남한사람인 우리들도 현대사회의 변화의 속도를 학교교육을 통해서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남한사람들도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 재사회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하물며 전혀 다르고 폐쇄된 사회에서 살다 온 북한이탈주민에 있어서는 남한사회에 정착을 위한 교육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은 지속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하여서는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한 예로 사이버 교육도 중요한 방법이겠지만 남한 적응상의 어려움이 많을 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더 적절하고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한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줄어 든 야학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으로서의 야학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인들을 위한 남한사회정착, 직업교육, 인성교육, 영어교육을 시행하여 통일이후에 일반화시키면 남북의 극간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심리적 지원 - 사회적 지지기반의 확충

북한이탈주민들이 환경의 단절과 상이함, 그리고 그에 대한 적응의 양태인 “의욕 넘침”과 곧 이어 올 “무기력감, 우울감”과 그로 인한 “신체화 증상”을 겪게 된다.

1) 북한이탈주민의 72%가 기초 생활 수급권자

예상되어진 그들의 적응 양태를 감안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지원과 사회적 지지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과 지역사회에서는 범죄 전단계의 두드러진 양상인 게임 및 알콜 중독, 흡연 및 이성에 대한 탐닉을 조절할 수 있는 건전하고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이 남한 사회 적응 상에서 느끼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서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처를 위한 조언과 분노조절을 위한 다양한 정신과적 프로그램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형 평화의 실천적 모색

최대석(이화여대)

2011년 현재 한반도는 여전히 분쟁 중이다. 분단 이후 60년간 남과 북은 승자 없는 전쟁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교전사태는 한반도 평화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안보연구에서 출발한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에서 평화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군사력의 팽팽한 균형에서 온다고 인식한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생존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 상태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현실에서 보면 일견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이 설득력을 얻는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볼 때 천안함 폭침은 억지(deterrence)의 실패이며, 억지를 성공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남북한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군사적 균형에 의한 한반도 평화는 불안정한 평화일 수밖에 없다. 즉 남북한이 치열한 대결을 통한 균형상태의 파괴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이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현실주의는 북한을 무력으로 붕괴시키는 방법 이외에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반면 자유주의는 현실주의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 만들기’에 주목한다. 협력의 제도화로서 다자안보체제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소산이다.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의 필요성은 1980년대 유럽의 CSCE의 성공에 자극받은 바 크다.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일 것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에서 안보개념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안보가 증진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러한 다자안보협의체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카니즘이 전적으로 무용하지는 않으며, ARF를 비롯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의체는 예방외교 차원을 넘어 포괄적 지역안보협력체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RF 참여를 거부하던 북한도 2000년부터 정회원 국가로 참여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 1992년에 남북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에는 남북 불가침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포괄적 안보와 맥을 같이 한다. 기본합의서가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반도 군비통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최초의 합의였다는 점에서 만일 실행되었다면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평화체제 수립으로 가는 발판이 되었을 것이다.

소련의 해체 이후 자유주의자들은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제로 인식공동체(epistemological

community)를 새롭게 주목했다. 즉 정치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라고 할지라도 이들 국가들의 관료, 학자,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공동체가 형성되면 이들이 개별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다 평화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도 이러한 인식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할까? 즉 남북 사이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형성된 대화와 접촉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문가, 학자, 기술자, 그리고 과학자들의 상호 접촉을 통해서 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면 인식공동체의 형성도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가들과 경제 전문가들 간의 상호 접촉을 통해서 북한 경제관리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세계경제의 흐름을 학습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러한 학습의 축적은 자연 상호간 인식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인식공동체의 한반도 적용의 유용성이 아직 증명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북한은 1980년대의 소련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 특성이 강해서 북한의 과학자, 학자, 전문가, 관료들의 사고의 유연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는 결국 시간의 문제이다. 즉 남북이 대화와 접촉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어느 순간에 북한에서도 학습과정을 통해서 사고의 변화가 생겨날 수도 있다. 인식공동체의 적용은 한반도의 장래를 조금 길게 내다 볼 때 분명 긍정적이다.

갈등으로 대표되는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은 평화를 특정한 목표에 도달한 상태로 간주하고, 이를 가치 기준으로 삼아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현 상황의 평화지향적 변화를 촉진하려 한다. 그러나 비판적 평화연구는 안보연구와는 달리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학적 이론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판적 평화연구가 원하는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 및 국제정치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비판적 평화연구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사회운동을 통해 평화를 구현해 나가는 작업을 통해 점차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현실적용의 가능성도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비판적 평화연구의 주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하고 접근해야 한다.

비판적 평화연구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근원적 평화는 분단구조의 해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 분단구조 아래에서는 통일이 평화보다 절대적 가치로 제시되며, 통일을 위한 전쟁조차 평화와 크게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연구의 관점에서는 평화가 없는 한반도의 통일은 무의미하다. 즉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중요하다. 결국 평화는 통일의 필요조건이자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분단체제 아래에서 통일을 가져오지 못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가 아니며,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는 통일을 향한 평화이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안보연구와 평화연구에서 성립된 평화이론들은 각기 상이한 세계관을 통해서 현실세계의 다른 측면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평

화이론들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한반도형 평화의 실천적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전쟁의 부재가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일수는 없다.

둘째, 한반도에서 통일과 평화는 함께 동등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다.

셋째, 한반도에서 평화는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

한용섭(국방대 교수)

1. 미중관계와 남북한 관계 변화 양상을 통해 본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지금까지의 미중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성 속에서도 협력에 그 중심축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의 미중관계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그에 걸맞은 군사력의 증강으로 인해 갈등적 경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 초반에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으며, 군사비면에서는 2020년대에 미국은 5,000억불, 중국은 2,000억불 내지 3,000억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를 상대로 하고 있으나, 중국의 군사력은 동북아에 영향력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군사적 세력균형은 2030년대가 되면 대등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미래의 미중관계와 남북한 관계의 변화 양상이 협력적인가 갈등적인가로 구분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시할 수 있다.

미·중 관계와 남북한 관계 변화 양상

		미·중 관계	
		협력적	갈등적
남북한 관계	협력적	지역평화·안정 남북평화 공존	지역냉전 남북갈등 방지
	갈등적	지역평화·안정 남북갈등 관리	지역냉전 남북관계 악화

첫째 시나리오는 미중관계가 협력적이고 남북한관계가 협력적인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동북아 지역은 대체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것이며, 남북한은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2001년 9·11이후의 미중간의 협력적 분위기와 2000년 6·15이후의 한반도에서 화해협력 분위기가 겹쳐 있을 때에 가능했던 것이다. 북한내부 사정을 보면, 김정일 체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에 가능했었던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부자세습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내부통제와 외부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는 미중관계가 협력적인데 남북한 관계가 갈등적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동북아 지역이 대체로 평화스러우나, 남북관계에서 갈등이 조성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미중 양국은 남북한간의 갈등의 여파가 한반도에만 국한되도록 갈등관리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 양국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미중 양국은 남북한간의 갈등을 잘 관리하여 지역차원의 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예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클린턴 2기 행정부 시절 미중 관계가 회복되고, 북미간에 제네바회담을 통해 제네바핵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 동안 남북관계가 긴장되었던 때에 발생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셋째 시나리오는 미중관계가 갈등적인데 남북한관계가 협력적인 경우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동북아지역이 미중간의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발생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간에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남북한간에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간에 직접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은 반면 미중 간에 대만문제를 비롯한 지역 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예는 1990년대 초반 남북한 간에는 기본합의서 등으로 관계가 협력적이었으나, 미중 간에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이다. 만약 북한에서 김정은 세습체제가 안착되고 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혁개방을 시도한다면 남북한관계가 협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시나리오는 미중관계가 갈등적이고 남북한관계도 갈등적일 경우이다. 이 경우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미중간에 갈등 양상이 생기고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어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분열과 대결이 증폭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2010년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남북한 관계 악화에 미국과 중국이 각각 대응하면서 미중관계의 갈등이 증폭된 시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중국의 국력의 상승과 군사력의 증강,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에서 중국이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힘을 행사하고, 미국이 동남아 각국과 해군협력을 증가시키면서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고자 할 때 해양에서 갈등양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과 경제적인 면에서는 협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해양진출과 우주로의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호주, 한국과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며, 인도와의 사실상의 동맹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국 등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해군과 공군의 접근을 저지하고 지역에서의 우위를 거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자공격능력, 사이버작전능력, 장거리타격능력, 우주체계 능력, 해공군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에서 군사태세를 강화시키며 전략적 유연성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대해서 남지나해와 동지나해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며 부인할 수 없는 주권의 문제라고 하면서 이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근해적극방어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해군의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전투력을 개발함으로써 미국의 지속적인 접근전략에 대해 대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양상은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향후 3-5년간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연속으로서 네 번째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2012년에는 한국, 중국,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해당되고 있고,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를 목표로 하면서 김정은 승

계체제 공고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한의 안보를 인질로 잡고 도발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은 국내에서의 집권초기에 권력의 장악과 내정통제를 위해 중화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대외적으로는 강경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미중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북한은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착과 대내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남북한간에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남북한 갈등과 미중간의 갈등이 교차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는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한국에서는 국론의 분열 양상이 확산될 수 있으며, 북한에서는 남한의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관계가 갈등적이 된다면, 남북한 간의 갈등도 해소하기 힘들고, 지역정세는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내에서는 적어도 외교안보분야에서는 국론통일이 필요하고, 북한의 대 남한 분열 조장을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할 필요성 또한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런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내부의 모순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게 될 것이다.

2.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남북한 관계가 이중의 갈등을 겪을 경우, 한반도 평화구축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외부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 혼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김정은 승계체제가 북한의 희망대로 안착할 경우 북한은 대외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 내부의 모순으로 인해 북한급변사태도 발생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한반도 평화구축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구축전략의 기본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협력적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지 않도록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억제전략과 대화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네바합의 이후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는 연설에서 "북한과 억제와 대화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햇볕정책은 대화와 협력을 너무 강조했으며,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억제를 너무 강조한 바 있다. 코너에 몰린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대북정책은 억제와 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정례화, 제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개최되었으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중단된 적이 있고, 그후 완전 결렬되어 버렸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6자회담 재개 시에는 6개국의 차관급수준으로 회담대표를 격상시키고 정례화 제도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도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지 않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이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과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

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기미를 보일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도 병행 개최하여 한반도평화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4자회담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아울러 북미회담과 남북회담을 개최하도록 하고, 남북한 회담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민주화될 필요가 있다. 선군정치를 개혁하여 민생을 우선할 수 있도록 외부 세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고 그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정권이 변화를 외면하고 내부통제와 외부적대시 정책을 고수한다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민생을 우선시하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지향하는 신사고를 가지도록 주변국들이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 정권이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고 평화건설에 나서도록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가 설득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만약 남북한간 혹은 북중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추동하기 위한 작업에 최우선순위가 놓여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국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반도이 평화통일과정과 관련지어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북한주민의 대다수가 한국을 선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장기적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위한 식량, 의약품 지원은 북한정권과 분리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대결과 갈등을 지양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다. 몇 년 만에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몇 십년 후에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부터 이 작업은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진행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획득하고, 그 컨센서스에 근거하여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 통일인 것이다.

DMZ, 20세기가 남기고 간 냉전유적

함광복(한국DMZ소장)

1953년 7월 27일생인 DMZ는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면 만 58세,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훨씬 짧은 환갑노인이다. 그가 태어나던 순간을 역사학자 페렌바르크는 그의 책 ‘어떤 전쟁’(This Kind of War)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월요일, UN군사령부의 윌리엄·K·해리슨 중장과 북한의 남일이 1952년 휴회 기간에 공산 측이 건립한 목조 건물로 들어갔다. 10시 1분 그들은 쌍방이 준비한 18개 문서 중의 첫 번째 문서에 서명했다. 그들이 모든 문서에 서명하는데 12분이 걸렸다. 서명이 끝나자 그들은 각각 일어서서 아무런 말도 없이 걸어 나왔다.

그들은 일단 싸움을 멈추자며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한반도 허리에 서울과 평양을 축으로 한 동서 두 이데올로기 전선 틈새에 폭 4km의 완충지대, DMZ가 설정됐다. 12분 만에 태어난 그 DMZ가 이순(耳順)에 접어들었다. 이순은 생각하는 게 원만해지는 나이이다. DMZ도 젊은 시절 살아 팔팔 뛰던 기개나 용기, 무언가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욕망 따위가 소진돼 가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비교적 순리대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듯 했다.

그러나 그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를 맞았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가 포격 당했다. 만일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엄청난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 할 것이다. DMZ는 지금 시제 상 전시(戰時)다. 살아 버린 줄 알았던 이데올로기 전선은 다시 이순의 나이답지 않게 시퍼렇게 되살아났다.

그러나 통일의 시계가 예상보다 늦게 돌아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불꽃은 마지막 한번 타오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작금의 팽팽한 남북관계를 통일로 가는 수순으로 보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른다. 무언가 통일 기운이 감지되는 것은 사실이다. 분명히 DMZ의 냉전 배터리는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다.

통일, 그것은 DMZ의 용도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연 환갑 DMZ는 이제 사라지는 것일까? 사라져도 좋은 것일까? DMZ는 20세기 중반에 태어나 굴곡 많은 냉전세기를 21세기 까지 릴레이 하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왔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목전의 과제가 됐다. 그러나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우선 먼저 극복해야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DMZ에 대한 정책연구는 제대로 돼오지 않았다.

손 하나 까딱 안 한 자연은 없다

물론 DMZ에 대한 정책제안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1971년 5월 6일 군사정전위 제315차 본회의에서 로저스(F. M. Rogers) 유엔군수석대표가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 된 DMZ를 비무장지대화, 즉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같은 해 국토통일원의 통일문제세미나에서도 DMZ의 국제평화지대(International Peace Zone)화가 제안됐다. 두 제안은 DMZ 정책제안의 효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남북교역 자유지대, 평화구역 설치, 남북관광지

공동개발 등이 제안됐다. 잇따라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자치단체 등에서 우후죽순으로 정책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1999년 9월 정부가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지정 계획을 내놓은 것은 그때까지 시도했던 ‘직접적인 평화정책’과 달리 자연생태계를 매개로 한 ‘간접적 평화정책’이다. 2001년 환경인 신년 인사회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한반도 비무장지대 접경생물권보전지역(The Korea DMZ TBR)’ 계획이 제안됐으며, 2004년 7월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지정도 제안됐다. 방주의 설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보완돼 갔다.

2010년 미증유의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던 그해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부는 부처별로 경쟁하듯 DMZ의 보존과 이용 정책을 쏟아놓았다. 문화관광부는 군사지대 DMZ를 관광지대 PLZ(Peace Life Zone)로 바꾸려는 기존 계획에 박차를 가했고, 환경부는 DMZ 일대의 자연생태계 보전 일환으로 DMZ 내의 자연생태계 조사를 단행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DMZ 인접 지역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접경지 지원법을 적극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통일부는 이들 부처 간의 소모적 경쟁을 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umbrella기능이 필요하다는 ‘코리아 DMZ 협의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제안은 마치 지구 대홍수 때의 노아처럼 방주(方舟)를 짓자는 것처럼 이상주의에 매몰되거나 지나친 아이디어 수준의 반짝 이벤트의 경향이 적지 않았다. 그 많은 구상 가운데 단 하나도 실천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이들 DMZ 정책이 ‘DMZ=자연’이라는 등식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도 우리 스스로 편협함적에 빠지게 했다.

“DMZ에는 반세기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자연이 있다”든가, “DMZ는 민족분단이란 아픔을 주었지만, 자연생태계의 보고라는 선물을 보상했다”는 등의 주장은 DMZ 자연생태계에 대한 경전이 되다 시피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자연’은 그곳에 없다.

DMZ 자연생태계 조사는 휴전협정 직후인 1954년부터 실시됐다, 그 후 정부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로부터 무려 20여 회에 이르는 조사가 단행됐다.

▶1966년 : 한국자연보존연구소(한국자연보존협회 전신)와 미 스미소니언 연구소 2년 동안 예비학술조사 ▶1972년 : 한국자연보존협회 66년 조사지역 재조사. 문화재관리국 재정보조 ▶1987년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민통선북방지역 자원조사 ▶1991년 : 청천문화재단 3년 간 생태조사/환경부 강원 경기도, 도서지방(백령, 연평도) 자연생태조사 ▶1995년 : 환경부 강원도 민통선지역 자연환경정밀조사/산림청 임업연구원 2000년까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자연생태 조사 ▶1996년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강원도 3개 지역 생태계보호지역 지정 용역조사(환경부) 그 외 국토통일원이 접경지역 기초조사를 한 일이 있다. ▶2009년 : 환경부는 UN사의 허가를 받아 DMZ 내의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국제기구에 의한 DMZ 생태 조사도 있었다. 1992년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유엔환경계획(UNEP)을 통해 DMZ국제공원조성을 제안하면서 미 웨스팅사에 DMZ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자연조사를 의뢰했으며, 미 아시아재단에서도 이 무렵 재미 한국 학자에 DMZ자연생태 연구를 용역 준 일도 있다. 1996년엔 유엔개발계획(UNDP)이 서울대 환경생태계회연구실에 DMZ생태조사를 의뢰했었다. 언론, 환경단체 등이 취재, 독자적 목적에 따라 조사한 일도 있었다.

이들 조사에서 밝혀진 DMZ 자연상은 ‘빈(貧)자연생태계’라는 것이다. 생태적 천이가 중단된 방해극상(妨害極相:Dis-climax Forest)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온대지방의 경우 삼림이 파괴된 후 극상림(極相林:Climax Forest)에 도달할 때까지 150~200년이 걸린다

고 볼 때 현재 이 일대는 생태적 천이(生態的 遷移:Ecological Succession)이가 지속중이거나 천이 자체가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DMZ 자연생태계 조사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임업연구원의 조사는 DMZ일대의 임목축적량이 남한 평균의 48%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는 상당 지역이 당장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될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발했다. 그러나 DMZ 자연에 대한 그런 비판은 주목받지 못했다. 오히려 시선은 연구업적 쌓기, 동식물 그리고 곤충의 ‘신종(新種) 찾기’ 경쟁에 더 쏠렸다.

연구 실적이 축적되지 못했거나, 이미 여러 차례 실시된 조사가 자주 중복됐고, 상호보완도 되지 못했다. 조사내용도 연속성이 없었으며, 활용도도 낮았다. 이 때문에 DMZ를 가 볼 수 없는 일반인들은 그곳을 가기만 하면 ‘자연의 보물’을 캐올 수 있는 보물창고인 것으로 알거나, 막연히 그곳엔 자연의 모든 내용물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원시의 숲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DMZ에 대한 몇 가지 실수

사실 우린 DMZ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

첫째, DMZ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DMZ가 서해안 한강하구에서 동해안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해의 끝 섬 백령도에서 동해안까지라고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조항’은 군사분계선 제0001호 표지 말뚝을 임진강 하구에, 마지막 제1,292호 표지 말뚝을 동해안 동호리에 세우며, 이 선 좌우 2km 구간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한다고 돼있다. 그렇다면 DMZ는 군사분계선 제0001호 표지판에서 마지막 제1,292호 표지판이 서있는 곳까지인 것이다. 이 거리가 155마일일까? 그러나 최근 김창환 등은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 이 거리가 148마일이라고 정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터법으로 환산해 DMZ 길이를 248km라고 말해왔으나, 237km로 정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DMZ에는 DMZ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정전협정 제1조 제6항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떤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DMZ의 약속’은 1963년부터 완전히 무너졌다. 유엔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이 먼저 군사분계선 북쪽 DMZ를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초소를 진지로 구축했으며, 진지와 진지를 지하 터널로 연결하고 나무를 심어 위장했다. 그리고 1965년부터 중화기와 전투병력을 대거 투입했다. 1968년 이후 남방한계선도 무시되기 시작했다. 남,북한군의 방어 철조망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시계(視界)와 사계(射界)가 용이한 곳을 찾아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했다. 지금 DMZ 전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중심으로 2km씩 후퇴하기로 했던 최초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봐야 한다. DMZ는 DMZ에서 사라졌다.

셋째, 그곳의 전쟁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관과하고 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뒤에서 수행되는 이 교묘한 전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시계와 사계’를 방해하는 초목을 불태워 없애는 ‘화공전법’은 아직도 활용되는 DMZ의 전쟁 방법이다. 이 기막힌 ‘불 전쟁’을 하지 않기로 남북한군이 합의한 2000년 한 해 DMZ 서는 19회의 불이 났으며, DMZ 총면적의 40%에 이르는 371km²의 숲이 불탔다. ‘화학전법’도 동원됐다. 1968년, 1969년 2년간 DMZ의 풀과 나무는 에이전트 오렌지, 블루, 모뉴런 등과 같은 고엽제

의 집중적인 세례를 받았다. 1974년 11월15일 중부저선 군사분계선 표지판 0270호 남쪽 1km 지점에서 땅굴이 발견된 이래 '땅굴전법'은 상식화 됐다. 약 200만발의 지뢰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DMZ는 '지뢰전법'이 실전에 활용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지금은 철거됐지만 휴전 이후 지금까지 그곳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쌍방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공된 뉴스나 해설, 가요, 경음악, 또는 비방 등 '선전전법'을 쏟아 붓던 '소리의 전쟁터'였다.

넷째, 그 곳의 인구활동을 무시하는 것은 실수 중의 실수이다.

센서스에 나타난 인구통계는 DMZ 주변지역의 인구를 감쪽같이 감춰놓고 있다. 군인은 '투명인간', 즉 인구조사에서 늘 '숨겨진 인구'다. 강원도 화천군의 면적은 909.45km², 2010년 말 현재 인구 현황은 총 8,813세대, 25,943명(남 13,352명/여 12,591명), 인구밀도는 28.5명이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밀도가 낮은 곳이다. 그러나 주둔군인 인구를 포함할 경우 인구밀도는 60명 선까지 올라간다.

우리는 그동안 DMZ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 인간이야 무지하건 말건 DMZ는 어디론가 제 갈 길을 간 것이 틀림없다. 아무도 원치 않았던 탄생. 그래서 DMZ에 대한 냉전 사생아의 표현은 아주 적절해 보인다. 어디론가 제 갈 길을 갔던 그 사생아가 반백의 중늙은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

2010년 그리고 2011년에도 온 나라가 그 중늙은이를 향해 개념 없는 질문을 퍼붓고 있다.

“당신은 오로지 자연생태계이지?”

그러나 난센스다. 그는 그 보다 몇 배나 더 큰 또 다른 가치를 지니고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는지 모른다.

그의 진짜 모습을 만나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DMZ 1953년 7월 27일 이래 60여 년 간 강력한 군사적 간섭을 받아 온 냉전 현실이 존재해 있는 곳인데도, 우린 막연히 거긴 손 하나 까딱 안 한 자연이 있는 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군사적 간섭 때문에 그 지역의 자연생태계는 냉전 현실에 적응하도록 변형됐을 것이다.

DMZ는 말 할 것 없고 민간인 통제선 일대도 민간인 출입은 자유스럽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산업화 간섭이 억제됐기 때문에 소중한 역사적 자원은 잘 보존됐을 것이다. 또 인간 간섭으로부터 고립된 문화 환경은 소멸되거나 다른 모양으로 개조됐을 것이다. DMZ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그것이 그곳에 존재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거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이 형성돼 있었다. 냉전, 그 정치적 이유가 '전혀 뜻밖의 유산'을 남겨 놓고 있었다.

첫째, 그곳은 단 하나밖에 없는 '냉전자연생태계공원'이다.

알고 봤더니 그곳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곳커녕 지독한 냉전간섭을 받은 땅이다. 따라서 그곳의 자연은 결코 교과서대로 천이(遷移)가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DMZ에 길들여지며 '전혀 뜻밖의 자연'이 됐을 것이다. 그곳을 자연을 이제 냉전자연생태계라고 고쳐 불러야 한다. DMZ가 '자연의 보고'인 것은 그곳엔 지구에 단 하나밖에 없는 '냉전자연생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곳은 살아있는 전쟁 박물관이다.

DMZ는 동서 두 진영 20여 개국이 전쟁을 치렀던 곳이다. 이토록 다양한 민족, 국가가 한 자리에서 전쟁을 한 경우는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다. 따라서 각종 무기와 군사체계, 전투력과 역량 그리고 국민성, 민족성이 반영됐던 모든 고지, 별판, 강 등의 전적지는 그 자체가 군사박물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개선하고 개량된 동서 두 진영의 최첨단 무기가 '전시'되고 있는 곳이며, 한편으로는 갖가지 전략과 전술이 짜여지고 실천되는 곳이자, 군인들의 군복과 계급장, 내무생활과 군기, 병사들의 먹고 자는 방법 등의 변천사가 새겨져 있는 곳이다. 한국군과 북한군,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군대에 관한 모든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곳이다. 온갖 전쟁의 도구와 전략과 전술을 모아다 놓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것들을 활용

하고 있는 곳이다.

셋째, 그곳은 한국사의 현장이다.

30만 년 전 평강고원 오리산(鵬山)에서 화산이 분출했다. 멀리 경기도 문산까지 용암대지가 형성됐다. 전곡리 한탄강가에서 아슐리앙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서 용암대지는 고인류가 살던 곳으로 판명됐다. 궁예는 화산이 빚어놓은 현무암으로 DMZ 한 복판에 도성을 건설해 태봉국 수도로 삼았으며, 한탄강, 임진강의 현무암 단애에 쌓인 산성들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각축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파괴된 구철원읍은 일본의 인공도시 자취이며, 직선을 강조한 노동당사는 북한의 건축이다. 그리고 DMZ가 까마득한 과거에서부터 살아 팔팔 뛰는 현재까지 모든 얘기를 간직하고 흘러가고 있다. 거긴 한국사의 현장이다.

넷째, 그곳은 민통선 문화를 발상시킨 냉전 사회학 교실이다.

사민(徙民)의 사전적 의미는 ‘백성을 이주시켜 국토를 개척하는 정책적 이주’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 사민정책은 20세기 DMZ일대에서도 대대적으로 원용됐다.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까지 DMZ 내에만 약 80개의 마을이 묻혀있다. DMZ 밖 민간인통제구역에도 100여 개의 빈 마을이 있었다. 그 빈자리를 개척민들로 채운 것이 민통선 이주정책이다. 민통선 범위를 가장 넓게 적용하던 1983년 현재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의 민통선 북방지역 81개 지역에는 총 8,799세대 3만 9,725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들 20세기 판 ‘사민’들이 민통선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습관과 사고, 풍속, 가족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질문화와 군사문화가 뒤범벅되고 동화돼 마침내 하나의 문화권을 빚어냈다. 민통선은 한국의 제3지대다. 인류 사회학 교실이자 한국판 멜팅포트(Melting Pot)다.

그리고 다섯째, 그곳은 근대문화유산의 전시장이다.

철원평야에 묻혀있는 구 철원읍은 1940년 현재 인구 3만7천명이 상주했다. 신기루처럼 사라진 일본의 계획도시 유적이다. 철원 노동당사와 승일교는 해방공간에 설계됐거나 세워진 남북한 통틀어 그 자취가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1948년 북한에 의해 설계된 승일교와 1996년 남한에 의해 설계된 한탄대교는 지금 한탄강 여울목에서 자본주의 건축과 사회주의 건축이 돼 나란히 서있다.

그 다섯 장의 그림들을 짜 맞추면 놀랍게도 DMZ는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DMZ를 우린 ‘20세기가 지구에 남기고 간 냉전유적’, ‘분단의 반사적 이익으로 선물 받은 자연·문화유산’으로 고쳐 불러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신뢰회복 노력과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으로 다져가자

황광석(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1. 머리말

동북아시아지역 재외동포와 관련한 시민사회활동을 10여 년 수행하면서 특별히 ‘조선족’이라는 재중동포와 ‘고려인’이라는 재러동포들에게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조국을 일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고자 의병으로 떨쳐 일어나 항일독립투쟁을 주도했던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바로 조선족이며 고려인동포였으나 수교 이후 20년이나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은 그들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대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재외동포들을 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취업하는 산업예비군으로서 유용하게 활용하면서도 불법체류자 신세에 빠트리게 하는 동포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소아병적 근시안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또한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의 직접적인 소재가 아니므로 동포정책에 대해선 이 정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하지만 분단되어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가 진정 평화로운 한반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만이 아니라 미일중러, 주변국의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미일중러에 거주하는 550만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오늘의 주제인 “한반도형 평화구상과 모색 : 실천과 이론”이라는 제2섹션의 제목을 보고 ‘이론’보다 ‘실천’이 앞서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국가 간 이해관계의 변수가 많고 더욱이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주제를 이론적으로 토론하자면 공허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행가능하고 또한 실행해 오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는 실천방안들을 살펴보고 그 실천들의 핵심동력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사회와 관련된 실천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작은 신뢰회복 노력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을 남북의 ‘상대방 불인정과 신뢰부족’이라 진단하고 싶다. 북은 남을 정전협정의 당사자에서 제외하고자 하고 남은 북의 정권이 인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무능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져버릴 것으로 상정하는 태도 등으로 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애써 부정하고자 하는 태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진정성에 입각한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이 병행된다면 6자회담을 위시한 각국의 외교협상노력이 빠르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수십 년 동안 반목과 대립을 거듭해온 남북이 서로 신뢰를 말로써 주장해본들 잘 먹혀들 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양쪽의 이익에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미일중러도 남북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멋진 평화 로드맵을 협정문서로 약속해 놓고도 실행을 안 하거나 실행을 방해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협박하는 일을 번번이 해온 외교관계에서 어떤 신뢰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신뢰회복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평소에 신뢰하지 않는 상대방이 기대 이상의 큰 것을 먼저 제안하거나 내놓게 되면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군다나 여태껏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은 거부하고 자기 요구부터 먼저 들어달라고 협상을 해온 마당이야 오죽하겠는가? 따라서 작은 것부터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지원,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작은 신뢰를 쌓아가며 큰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제3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자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경우에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동포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당신들의 조국은 남이요, 북이요”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개 “북도 남도 둘 다 우리의 조국이요”라고 대답한다. 그들에게는 통일된 한반도가 ‘완전한 조국’인 것이다. 여기에 실천적 열쇠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외동포사회에서 남과 북과 재외동포가 서로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잘 살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남북간 신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한반도 남북 신뢰회복과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남북 양자 간에 빚어질 수도 있는 충돌요소들을 러시아가 중재하는 다자간 구도이므로 지속성의 면에서도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라 보인다.

3. 남북러 삼각경제협력과 고려인의 역할

현재 한반도 남쪽은 ‘고용 없는 성장’과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하여 ‘일자리 부족’과 ‘사회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불안한 경제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식량가격마저 들쭉이고 있어 남쪽은 매우 위태로운 경제구조를 안고 있다. 그것은 수출의존형 경제가 안고 있는 숙명적인 경제구조적인 문제이다.

한반도 북쪽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자금난, 자연재해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 각 부문 간 연계시스템이 붕괴되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당분간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즉, 해마다 식량은 200만 톤에서 250만 톤이 부족할 것이므로 원조가 없으면 많은 인민들이 굶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고, 에너지 부족으로 산에서 나무를 베어 그 자리에 다락밭을 지어나가니 해마다 홍수재해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에 광산채굴권, 항만 조차권, 고속도로 부설운영권 등을 팔아서 근근이 버티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연해주는 두만강과 동해와 닿아 있는 땅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80%에 달하지만 인구는 2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나호트카 등 몇 개의 도시에 몰려있어 농촌에는 인구가 태부족이다. 그래서 절반이 넘는 농지가 경작되지

않고 버려져 있다. 연해주정부에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 북한의 노동력이 연해주로 유입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연해주를 포함하여 극동 시베리아지역은 에너지자원과 지하자원 및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남북러 삼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한국이 수교하기 이전부터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러시아의 토지와 행정지원이 결합하면 환상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남북러 농업협력프로젝트를 통해서 북의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고 남도 콩, 밀 등의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청년과 농민들의 해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시베리아의 부존자원을 남북러가 협력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남북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협력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모델은 각국 정부가 협정을 맺고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형태가 됨으로써 서로 이익이 되며 이런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실현됨으로써 구체적인 상호 의사소통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몇 년 전부터 연해주나 하바롭스크주에 가면 북쪽 노동자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마주치지 않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그만큼 남과 북에서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에 남한 기업인과 북한 노동자 등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있다. 고려인 기업가들 중에는 상당한 재력을 이룩한 기업인들도 많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이든 북이든 자유롭게 거래한다. 고려인 기업가들은 자연스럽게 남과 북 간을 연결하고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을 고려인들도 안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한이 북한에게 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뼈아픈 지적을 한다. 우리 민족끼리 아픈 상처는 서로 보듬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정치적인 문제야 복잡한 셈법으로 국가 간에 풀어가더라도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동포애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에서도 한민족이 존중 받고 재외동포사회의 신망을 얻을 수 있고 남북동포 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의 식량 부족문제, 에너지 부족문제, 지하자원 부족문제, 대륙물류 소통문제 등의 면에서 남북러 3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작은 기업단위에서의 다자간 교류협력이나 정부 차원의 대규모 추진사업이든 남북이 상호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고려인동포들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4.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우리 힘으로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광복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광복군이 본토 진격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실행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이 일주일만 더 버텼으면 우리 광복군이 조국 본토로 진격했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분단을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선생님은 주체적·주도적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사의 가정을 세워서 이야기한 것이었다.

독일과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외세에 의하여 분단되었다. 그런데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이룩하였는데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상태이다. 독일통일이 소련의 붕괴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서독 간에 교류와 소통이 꾸준하게 있어왔었던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동서독도 우리 못지않게 외세의 간섭이 심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독일국민들은 합의 하에 통일을 이룩하였다. 우리도 독일의 경험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통일을 하지 말자거나 먼 훗날에나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는 “통일비용이 더 들기 전에 미리미리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대답하고 싶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말했듯이 통일은 ‘매우 남는 장사’다. 북의 우수한 저임금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가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간 중소기업들을 다시 한반도의 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2천5백만 명의 신규시장을 바탕으로 잃어버릴 뻔 했던 경쟁력을 되찾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가 온전히 유라시아대륙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TKR(한반도중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로 인한 물류 대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반도국가로서 대륙과 해양국가의 교량 이점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고, 국민경제 내부의 산업분업연관체계가 더욱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일이 되었을 때 부족한 일자리를 어떻게 메우고 부족한 식량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회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남북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것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결코 총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만약 느닷없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의 동포들이 남의 동포들에게 ‘너희들은 우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라고 따져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통일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 ‘대혼란의 서곡’이 될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하였으나 통일은 슬기롭게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며 남북동포들과 재외동포들의 힘을 결집하여 우리 한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평화롭게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